

• 조세금융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 2024.
11.07. (목)

14:00-18:0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최 진선미 국회의원 · 오기형 국회의원

후 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 국회미래연구원

주 관 조세금융신문

발 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분석한 아시아 저출생 현황과 향후 전망, 정책공조 방향
알렌 용 | AMRO 그룹장

작 장 객금주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토 론 베트남 - 팜 민 투이 | 호치민 국가·지역 정치아카데미 교수
중 국 - 저우위보 | 〈인민망〉 한국지사 대표
일 본 - 미키토 마수다 | 고마자와 대학교 교수(경제학)
북 한 - 박소혜 | 국회도서관 비서관(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
러시아 - 마리아 디멘토바 | 리아노보스티 통신사 서울지국장
이집트 - 이쉬라프 달리 | 아프리카기자협회(CAJ) 사무총장
한 국 - 이동기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세무사, 국제조세 전문가)



자료집 다운로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목 차

개회사	진선미 국회의원	5
	오기형 국회의원	7

인사말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이사	9
------------	-----------------------	---

축 사	우원식 국회의장	11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3

기조강연

거시경제 측면에서 분석한 아시아 저출생 현황과 향후 전망, 정책공조 방향 ..	15
알렌 응(AMRO 그룹장)	

토 론	좌 장 : 광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	
	• 베트남 : 팜 민 투이(Pham Thi Minh Thuy) /	47
	호치민 국가·지역 정치아카데미 교수	
	• 중국 : 저우위보 / 〈인민망〉 한국지사 대표	55
	• 일본 : 미키토 마수다(Mikito Masuda) /	63
	고마자와 대학교 교수(경제학)	
	• 북한 : 박소혜 / 국회도서관장 비서관(북한학 박사)	75
	• 러시아 : 마리아 디멘토바 /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사 서울지국장 ...	83
	• 이집트 : 아쉬라프 달리 / 아프리카기자협회(CAJ) 사무총장	91
	• 한국 : 이동기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미국 공인회계사)	97

프로그램

- 주 제 :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 개최일정 : '24. 11. 07.(목) 14:00 ~ 18:00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 최 : 진선미 국회의원·오기형 국회의원
- 후 원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국회미래연구원
- 주 관 : 조세금융신문

시간		일정	세부 설명
13:45~14:00	15분	행사 등록	
14:00~14:15	15분	개회사	진선미 국회의원
14:15~14:30	15분	개회사	오기형 국회의원
14:30~14:35	5분	인사말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이사
14:35~14:45	10분	축사	우원식 국회의장
14:45~14:55	10분	축사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4:55~15:00	5분	기념촬영	
15:00~15:25	25분	기조강연 (Keynote Address)	<div> <div></div> <div> 거시경제 측면에서 분석한 아시아 저출생 현황과 향후 전망, 정책공조 방향 알렌 응 AMRO 그룹장 </div> </div>

시간		일정	세부 설명
15:25~15:30	5분	좌석 조정	
15:30~15:40	10분	세미나 개회	☞ 좌장 :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
15:40~15:55	15분	토론 (발표)	• 베트남 : 팜 민 투이(Pham Thi Minh Thuy) / 호치민 국가·지역 정치아카데미 교수
15:55~16:10	15분		• 중국 : 저우위보 / 〈인민망〉 한국지사 대표
16:10~16:25	15분		• 일본 : 미키토 마수다(Mikito Masuda) / 고마자와 대학교 교수(경제학)
16:25~16:40	15분		• 북한 : 박소혜 / 국회도서관장 비서관(북한학 박사)
16:40~16:55	15분		• 러시아 : 마리아 디멘토바 /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사 서울지국장
16:55~17:10	15분		• 이집트 : 아쉬라프 달리 / 아프리카기자협회(CAJ) 사무총장
17:10~17:25	15분		• 한국 : 이동기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미국 공인회계사)
17:25~17:50	25분	종합토론	☞ 좌장 :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
17:50~18:00	5분	세미나 정리 및 폐회	폐회 선언 / 광고

개회사

안녕하세요. 서울 강동갑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세미나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님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주관해 주신 조세금융신문을 비롯한 각 국의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 현재,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해결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3년 출생아 수는 26만 명을 하회하는 등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불안정한 사회적 환경이 꼽힙니다.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주거비 상승은 많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적 구조는 여성들이 출산을 선택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 마련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각국 전문가들의 논의가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심도 있게 탐구하고,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좌장을 맡아주신 광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님을 비롯해 모든 발제자 및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혁신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젊은 세대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 선 미**

개회사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세미나를 함께 주최해주신 진선미 의원님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0주년을 기념해 뜻깊은 자리 마련에 애써주신 조세금융신문과 각 국의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출생은 인구구조 변화부터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비용의 증가 그리고 경제성장의 둔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합계출생률이 0.72명까지 하락하며 성장잠재력 또한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에 따르면, 현 추세대로라면 100년뒤인 2120년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1,966만명으로 급추락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 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산율 회복을 통한 인구감소 문제 해소가 경제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저출생은 전 세계적 추세인 만큼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함께 비교·분석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아시아와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 러시아, 북한 등 각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이 자리가 더욱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례와 의견들을 검토해,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서울 도봉(을) 국회의원 오 기 형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조세금융신문 대표 김종상입니다.

올해로 창간 10주년을 맞이하는 조세금융신문이 진선미 의원님과 오기형 의원님께서 주최하신 '아시아 저출생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주관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초고령화로 접어들어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가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수는 2020년 5184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향후 2050년 4711만명, 2070년 3718만명으로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100년 후인 2120년 총인구수는 1966만명으로 급격히 추락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시와 지방 풍경이 양극화 영향으로 지방의 경우 인적이 드문 폐허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동안 조세금융신문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이 다른 대륙에 비해 유독 저출생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자살율, 노인빈곤율에 이어 저출생 부문마저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률의 경우 다른 1위와는 달리 초저출생률이 초격차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압도적 세계 1위의 초격차 초저출생률의 오명을 왜 우리 대한민국이 뒤집어쓰고 있는지 전문가들과 취재기자들이 수개월 동안 취재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우리는 ▲극도의 경쟁사회 ▲인구의 대도시 집중에 따른 주거비 상승 ▲부의 편중과 경제적 불평등 ▲관찰 예능 등 미디어의 무책임성 ▲노동에 대한 취약한 보호정책 등 몇 가지 정책적 함의(含意)를 찾아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으로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상황이 한국의 초격차 1위를 설명하는 유력한 단서였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 주거, 세금 등에 혜택을 주는 정책만으로는 출산율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사회심리의 전환이라는 접근을 모색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지리적, 역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유럽과 아프리카 등 다른 문화권에서 출산율 문제를 어떻게 천착(穿鑿)해 왔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오늘 국제세미나를 통해 한국사회가 향후에도 인구가 유지되는 대체출산율 2.1명을 달성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다하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국정감사 와중에도 귀한 자리를 준비해 주신 진선미 의원님, 오기형 의원님, 후원해 주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 국회미래연구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광금주 교수님과, 발제를 준비해 주신 알렌 응 AMRO 그룹장님, 그리고 영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신 일본 미키토 마수다 교수님과 베트남 팜 민 투이 교수님, 이집트 아쉬라프 달리 CAJ 사무총장님, 그리고 오늘 현장 토론에 참여해 주신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님, 박소혜 국회도서관 비서관님(북한학 박사), 러시아 마리아 디멘토바 리아노보스티 통신사 서울지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출생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될 여러 국가의 저출생 극복 사례들이 우리나라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조세금융신문 대표이사 **김 종 상**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진선미·오기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창간 10주년을 기념해 의원실과 함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조세금융신문사 임직원님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신 세계 각국의 발제자, 토론자들님께 축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합계출생률이 0.72명까지 하락하면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생은 인구구조 변화부터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비용의 증가 그리고 경제성장의 둔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도 출생률 하락에 지난해만 1만 5000여개에 이르는 유치원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출생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정확한 원인과 다른 나라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대응정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동아시아와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 러시아, 북한 등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에서 진단하는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으로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함께 고민하고 국회가 할일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국회의장 우 원 식

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입니다.



조세금융신문 창간 10주년을 맞아 먼저 뜻깊은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오형기 의원님과 진선미 의원님,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님, 발제를 맡으신 알렌 웅 거시경제 감시 그룹장 비롯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방분권과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혁신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될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와 전문가들의 고견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국제세미나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우 동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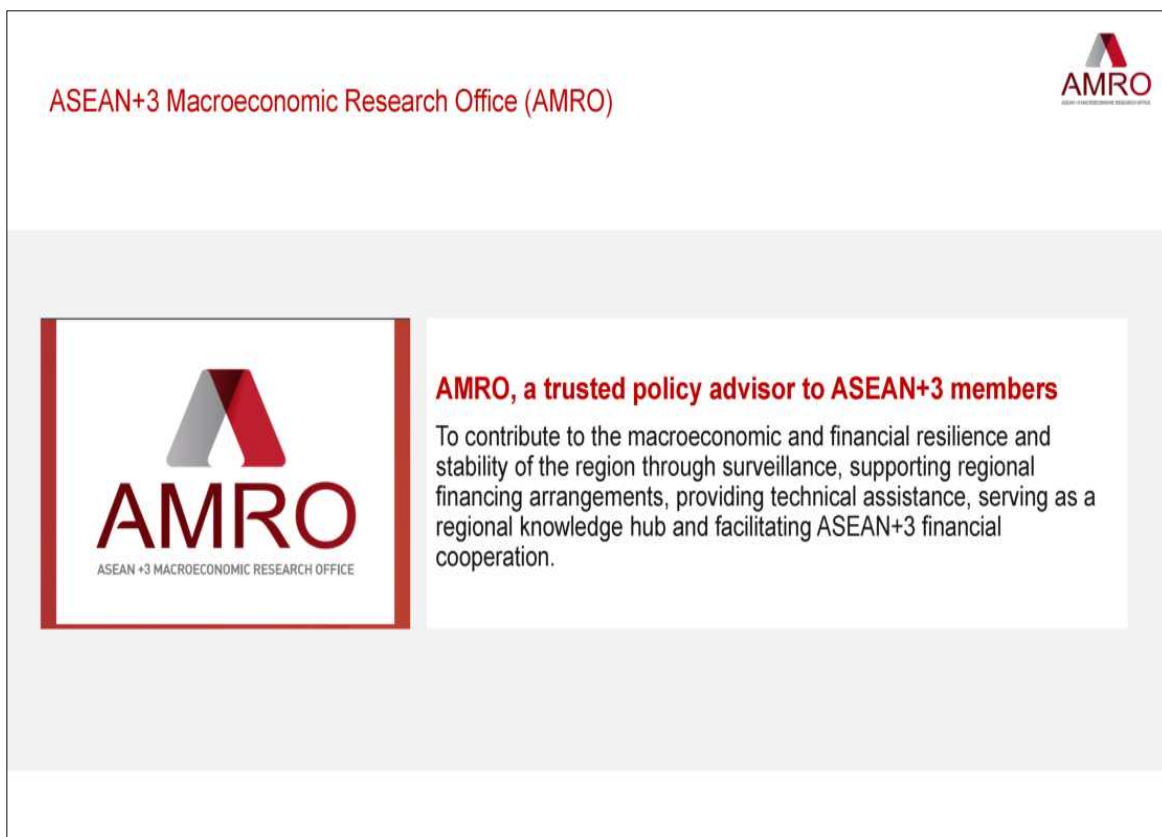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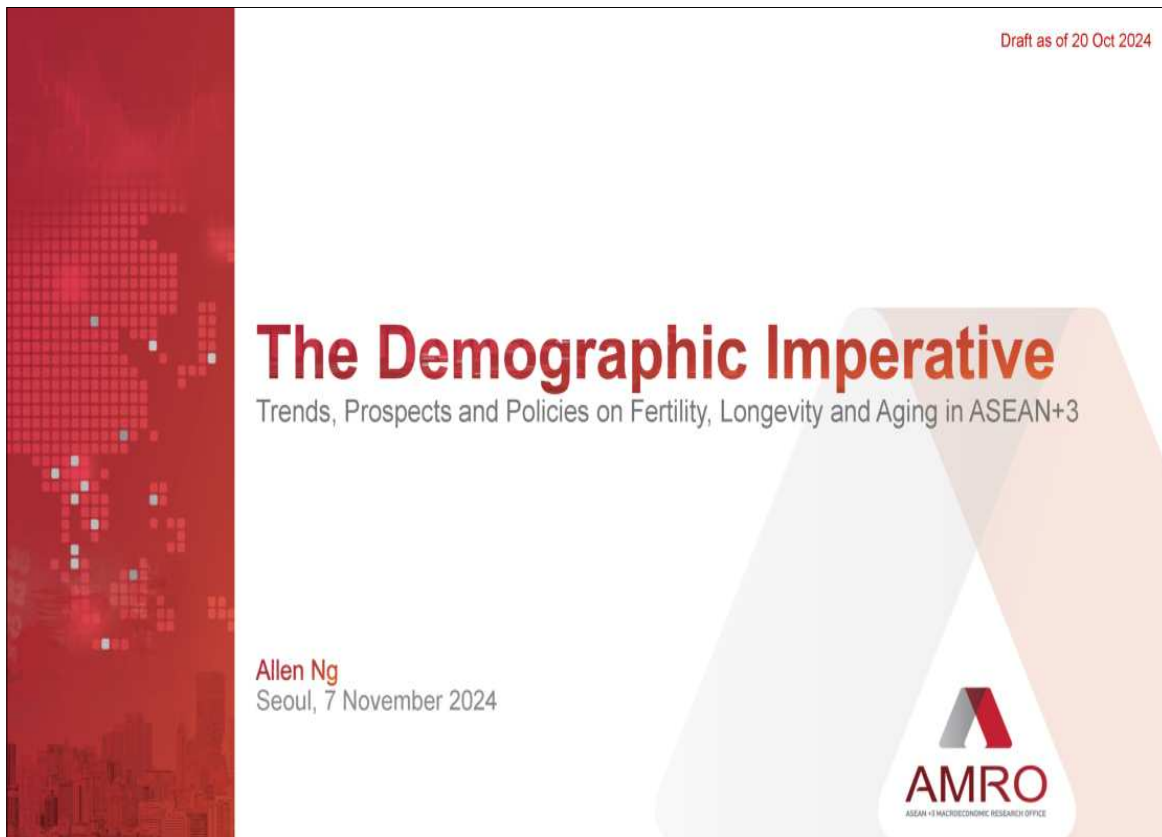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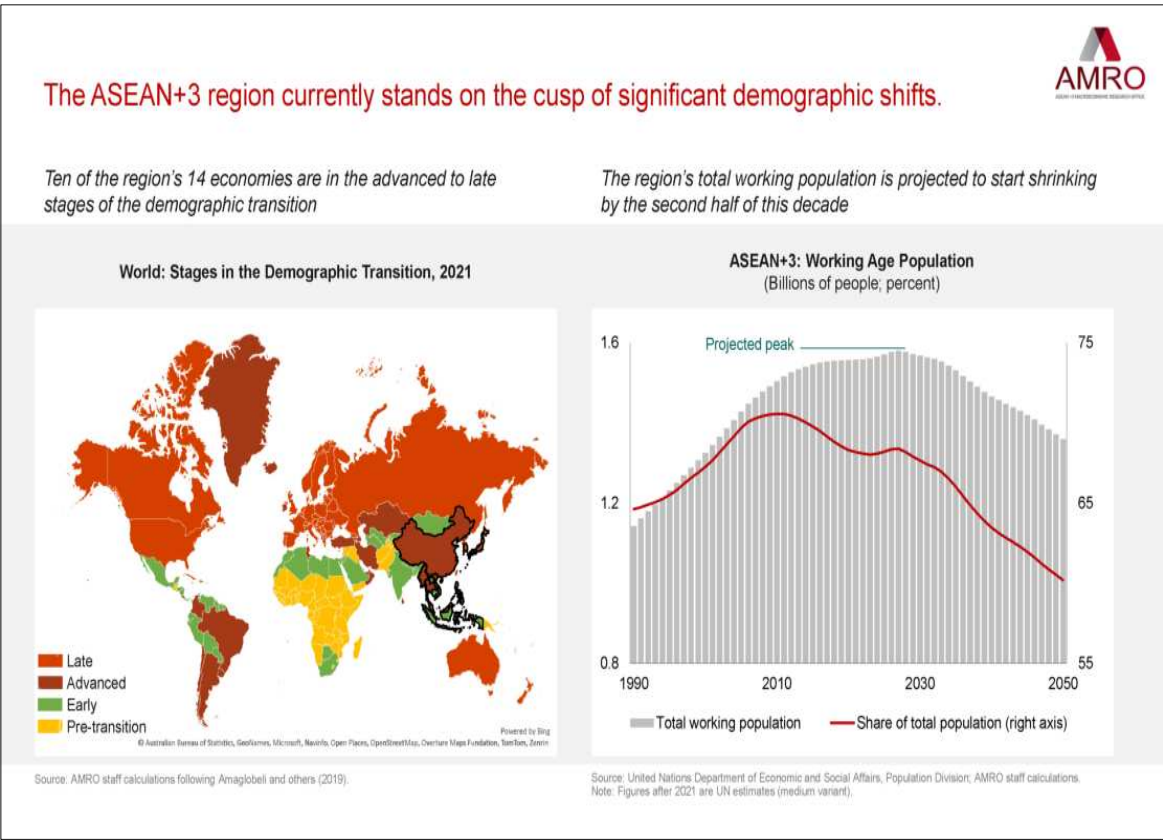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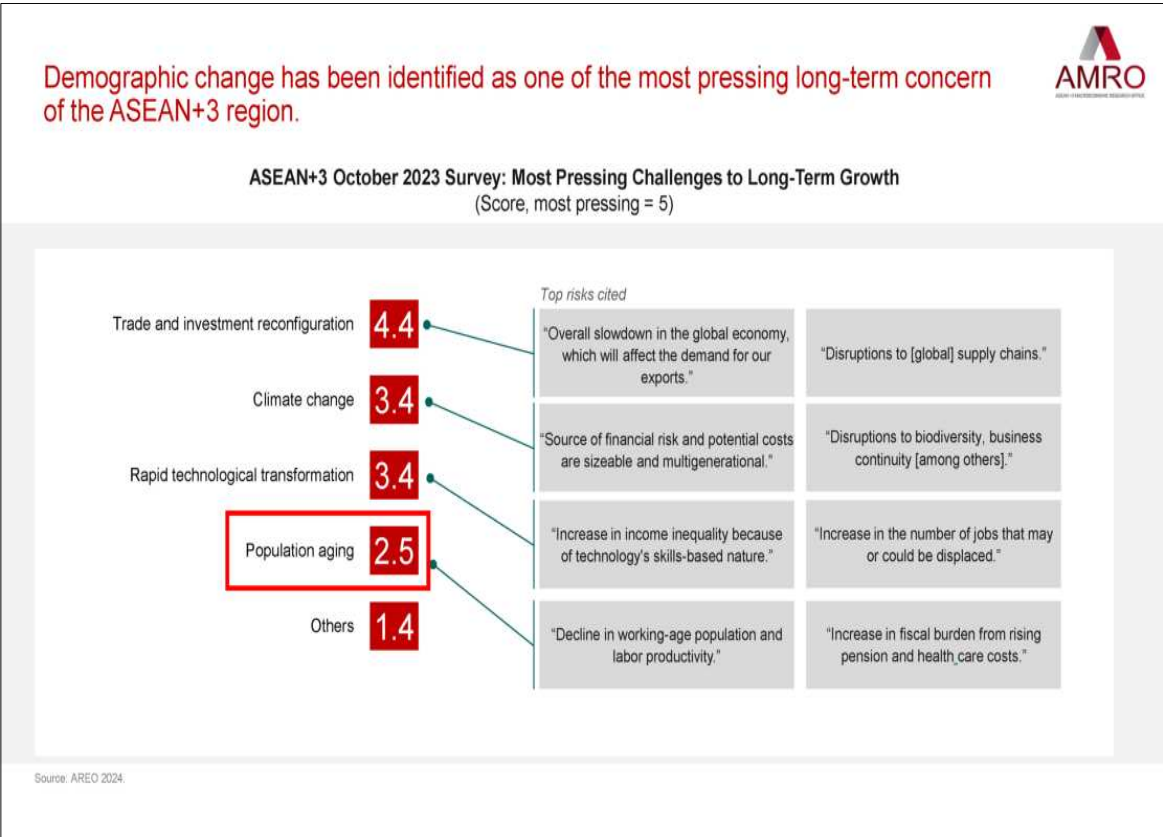
거시경제 측면에서 분석한 아시아 저출생 현황과 향후 전망, 정책공조 방향

알렌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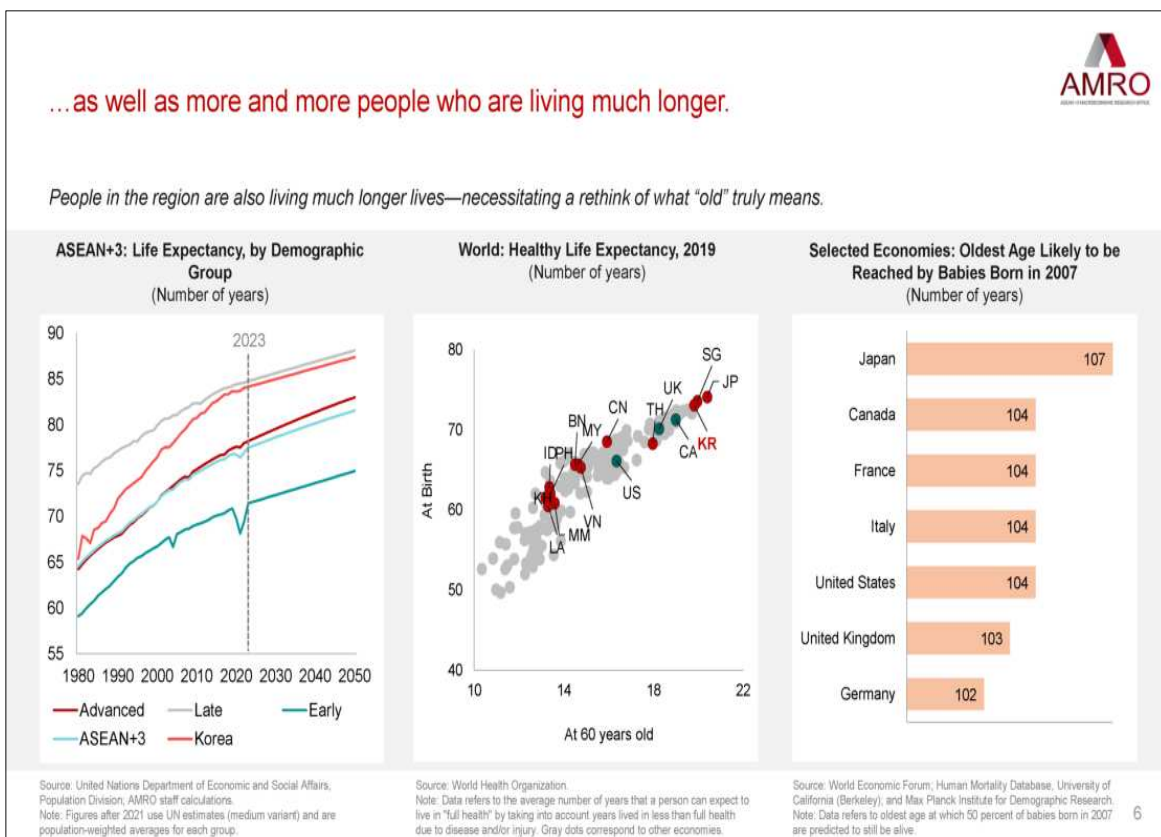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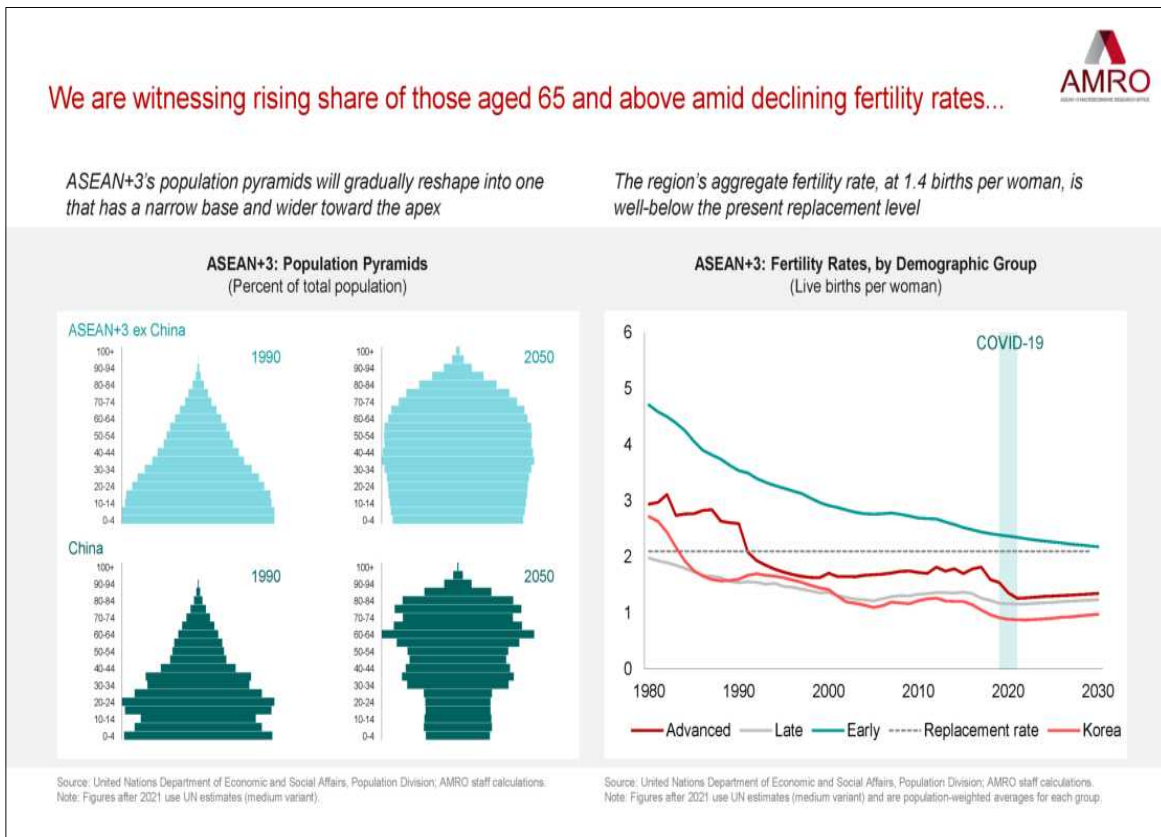
AMRO 그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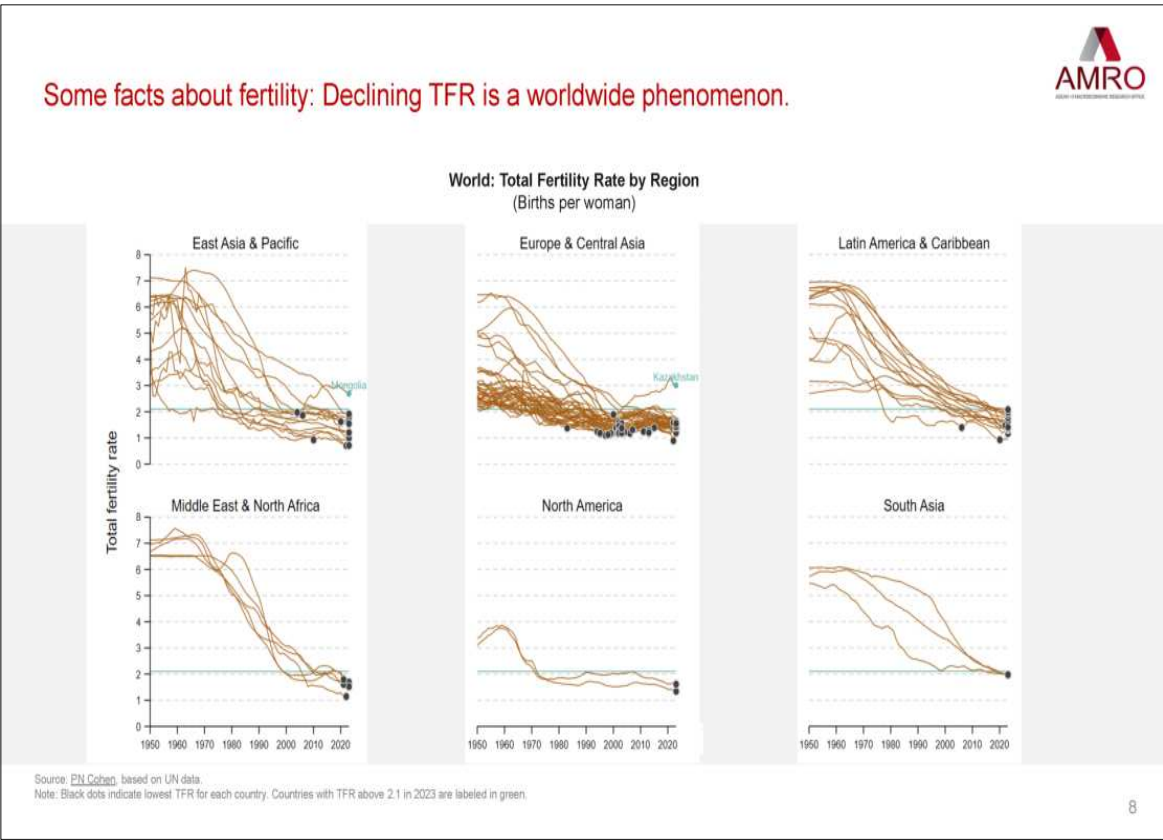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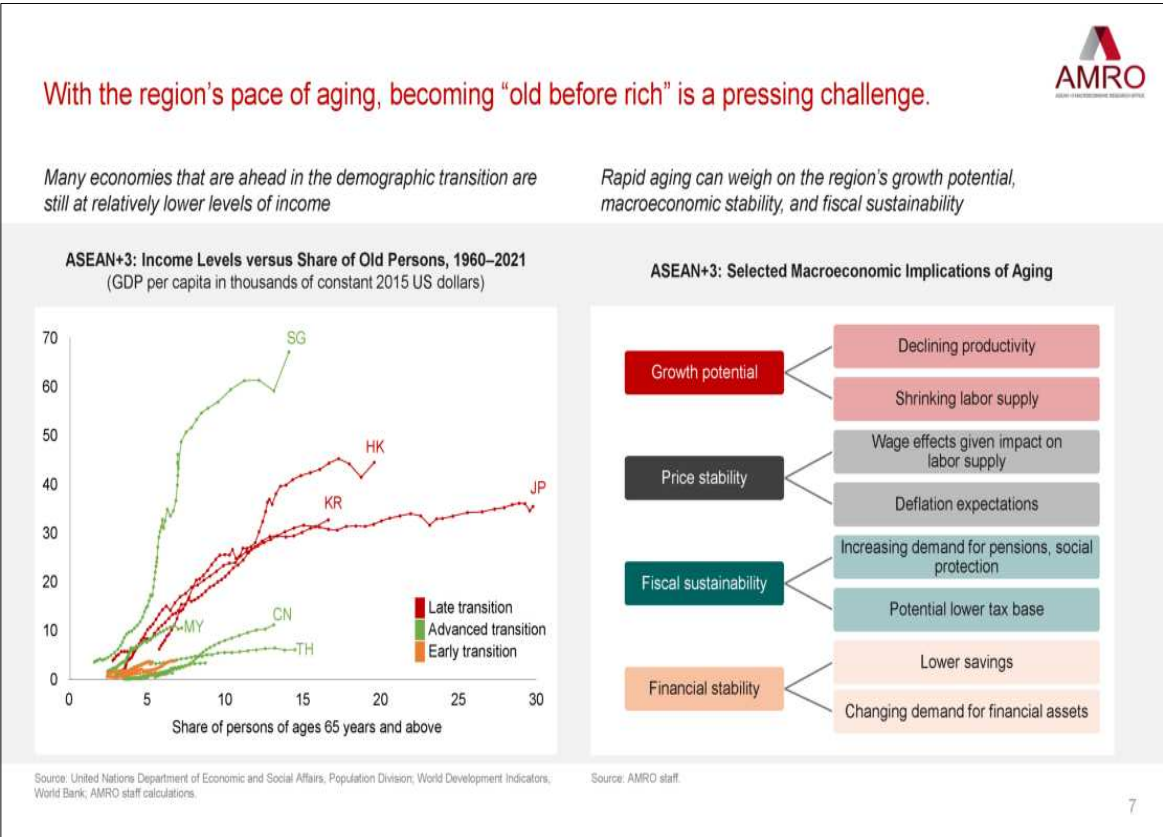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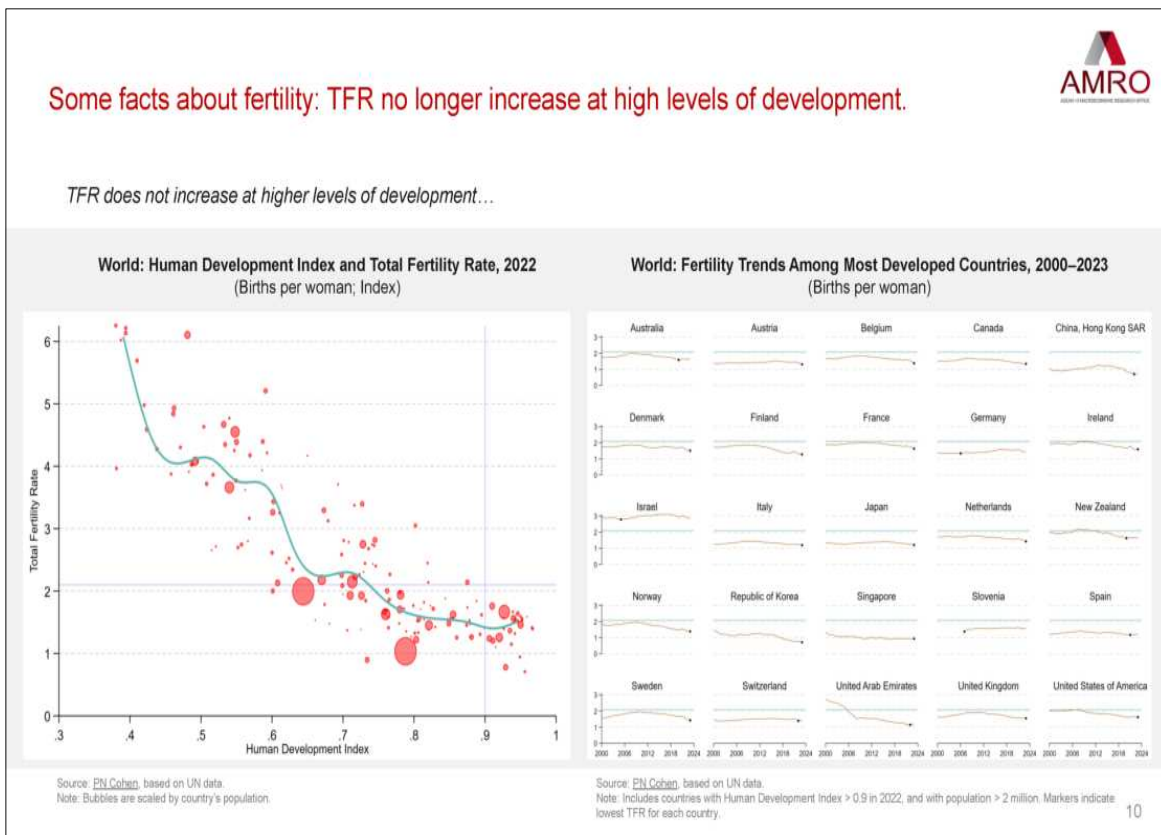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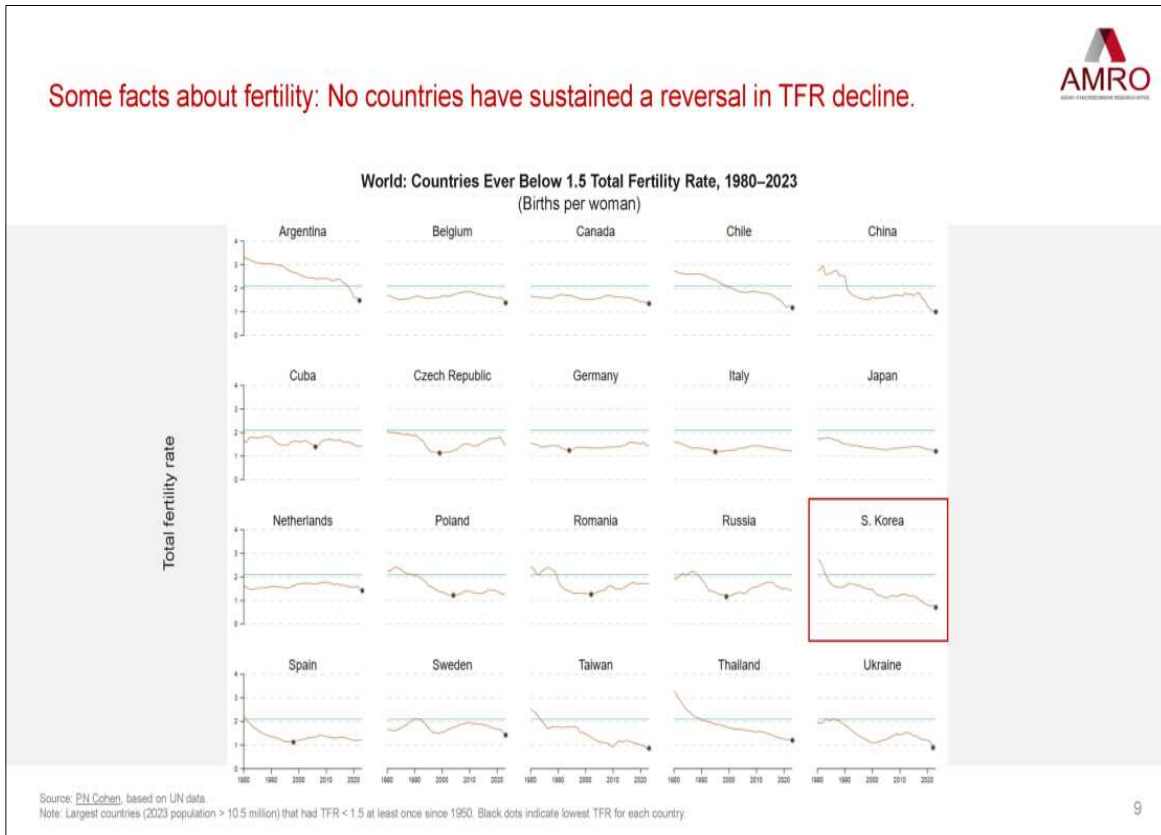




기조연설. 거시경제 측면에서 분석한 아시아 저출생 현황과 향후 전망, 정책공조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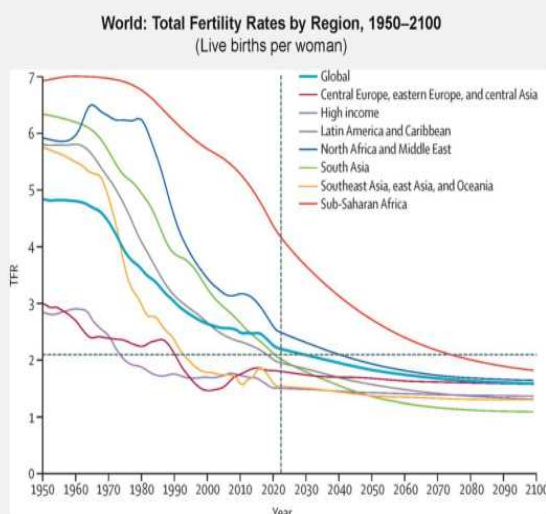




Some facts about fertility: TFR is projected to continue its decline.



Almost all countries will have sub-replacement fertility rates by 2100...



- Global TFR declined from 4.84 in 1950 to 2.23 in 2021.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to 1.83 by 2050 and 1.59 by 2100.
- In 2021, 110 out of 204 countries had below-replacement fertility. By 2050, this is expected to increase to 155 countries, and by 2100, 198 out of 204 countries (97.1%)
- East Asia as a whole is experiencing a significant fertility decline. The region's TFR is projected to decrease from 1.23 in 2021 to 1.16 by 2100.
- Southeast Asia is also experiencing a notable fertility decline. The region's TFR is projected to decrease from 2.05 in 2021 to 1.35 by 2100.

Source: GBD 2021 Fertility and Forecasting Collaborators
Note: The dashed horizontal line indicates replacement TFR (2.1), and the dashed vertical line indicates the year 2022 (the first forecast year).

11

Some facts about fertility: Even under positive scenarios, TFR is unlikely to return to the replacement level.



Selected ASEAN+3: Total Fertility Rate for Various Scenarios, 2050 and 2100
(Births per woman)

	Reference scenario		Education SDG achieved		Contraceptive met need SDG achieved		Pro-natal policies enacted		Combined scenario	
	2050	2100	2050	2100	2050	2100	2050	2100	2050	2100
Global	1.83	1.59	1.65	1.56	1.64	1.52	1.93	1.68	1.65 (-0.18)	1.62 (+0.03)
China	1.14	1.16	1.12	1.16	1.14	1.16	1.34	1.36	1.31 (+0.17)	1.37 (+0.21)
Japan	1.26	1.21	1.24	1.20	1.16	1.14	1.46	1.41	1.35 (+0.09)	1.33 (+0.12)
South Korea	0.82	0.82	0.82	0.82	0.79	0.82	1.02	1.02	0.99 (+0.17)	1.01 (+0.19)
Brunei	1.40	1.25	1.38	1.26	1.28	1.19	1.60	1.45	1.45 (+0.05)	1.39 (+0.14)
Cambodia	1.65	1.10	1.36	1.08	1.49	1.12	1.77	1.30	1.47 (-0.18)	1.30 (+0.20)
Indonesia	1.53	1.29	1.51	1.30	1.44	1.26	1.73	1.49	1.62 (+0.09)	1.47 (+0.18)
Laos	1.61	1.09	1.43	1.14	1.53	1.14	1.81	1.29	1.60 (-0.01)	1.39 (+0.30)
Malaysia	1.39	1.17	1.35	1.19	1.32	1.17	1.59	1.37	1.49 (+0.10)	1.38 (+0.21)
Myanmar	1.69	1.22	1.48	1.22	1.63	1.27	1.77	1.42	1.66 (-0.03)	1.47 (+0.25)
Philippines	1.84	1.50	1.78	1.48	1.62	1.43	1.84	1.70	1.78 (-0.06)	1.62 (+0.12)
Singapore	1.15	1.12	1.14	1.12	1.14	1.12	1.35	1.32	1.33 (+0.18)	1.32 (+0.20)
Thailand	1.13	1.04	1.13	1.04	1.08	1.02	1.33	1.24	1.28 (+0.15)	1.22 (+0.18)
Viet Nam	1.63	1.38	1.59	1.36	1.53	1.35	1.83	1.58	1.70 (+0.07)	1.53 (+0.15)

Source: GBD 2021 Fertility and Forecasting Collaborators
Note: SDG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2

“I cannot solve the problem, and I have given up.

I have given the job to another generation of leaders. Hopefully, they or their successors will eventually find a way out.”

— Lee Kuan Yew in 2013,
former Prime Minister of Singapore,
on his “30-year concern” of Singapore’s declining fertility rate

13

The demographic challenge in the region is a complex challenge requiring comprehensive responses and rethinking of old conventions

The Demographic Imperative

Foster family-friendly environment
How can we foster family-friendly economy and society? Education, employment, culture.



Aging well, aging better
How can we maximise the longevity dividend from a life-cycle perspective?

Productive immigration
How can we promote and manage healthy immigration to meet increasing labor shor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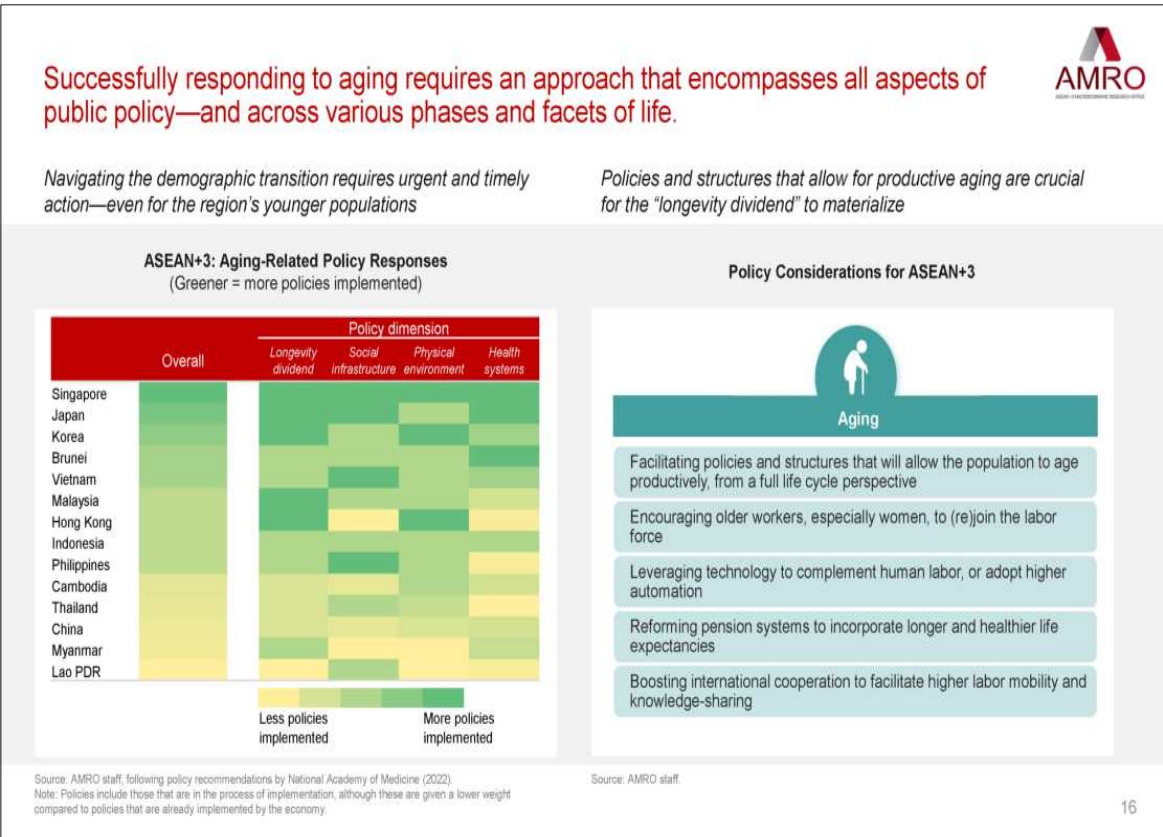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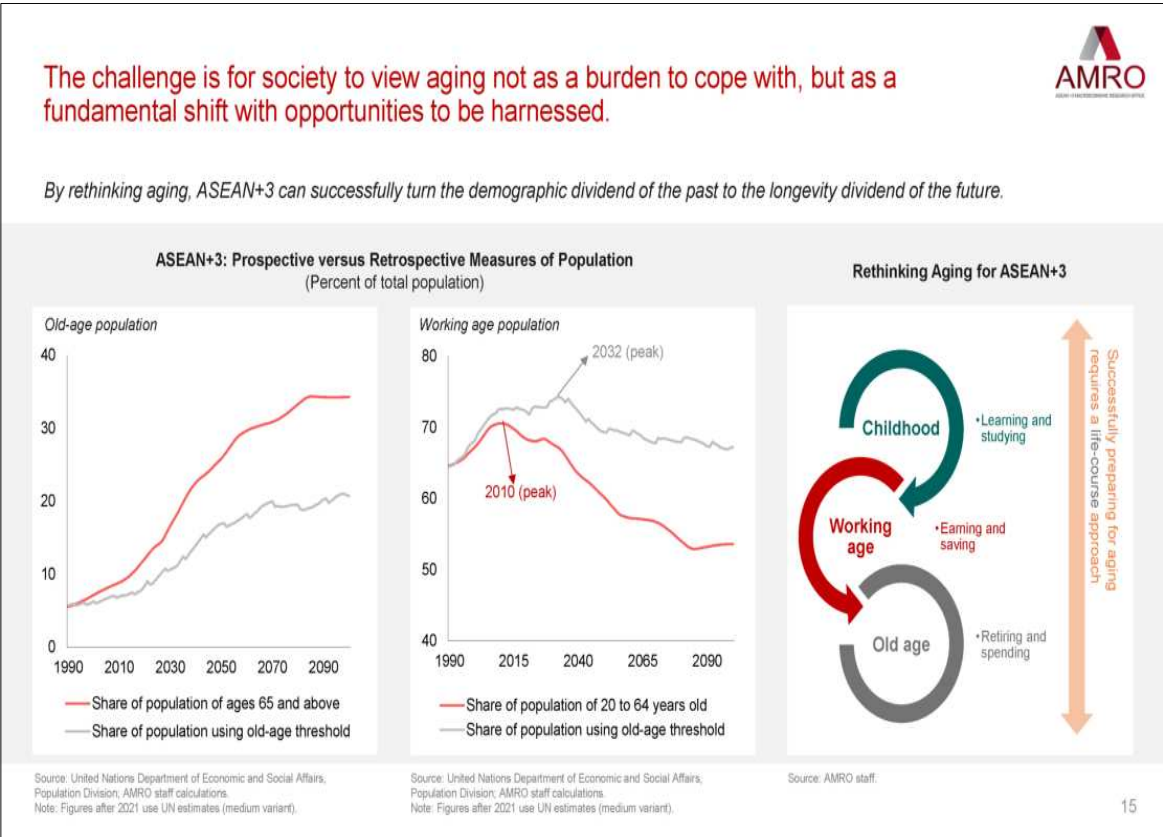


Promoting regional balance
How can we minimize the negative impacts of over-urbanization/over-centralization?



Human-complementary Technology
How can we redirect technological progress to improve labor productivity, and support workers

14



“Nearly all (roughly 90 percent) of th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in **actual fertility are accounted for solely by differences in desired fertility.**”

— **Lant Pritchett**
in his seminal paper “Desired Fertility
and the Impact of Population Policies, 1994

17

Ending footnote: Hope from a small Japanese town?

The small Japanese town – Nagi – managed to reversed its TFR from 1.4 in 2005 to 2.7 in 2021



Photo: Emiko Jacuka/CNN

- Nagi successfully reversed the national trend of declining fertility rates through **local- and community-driven, family-first approach** for more than 20 years
- Policies are multifaceted - financial incentives, child-rearing support, housing assistance, community-involvement.
- Nagi have fostered a community culture and norm that values large families. Many households have three or more children, and there is a general perception that having children is desirable and family-life will be supported by the community.

18

Thank you.



Contact Us

Add: 10 Shenton Way, #15-08/9, Singapore 079117

Tel: +65 6323 9844

Email: RegionalTeam@amro-asia.org

Website: www.amro-asia.org

Scan to
download
AREO 2024:
Navigating
Tomorrow



Summary
available in 10
languages

Script prepared for delivery (26 Oct 2024) – not to be distributed before delivery

The Demographic Imperative: Trends, Prospects, and Policies on Fertility, Longevity, and Aging in ASEAN+3

Slide 1: Introduction

Anyeonghaseyo. Good morning, distinguished colleagues. I'm honored to be here in these hallowed halls to discuss one of the most critical challenges facing our region: the demographic imperative of declining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s in ASEAN+3.

The title "demographic imperative" underscores the urgency and inevitability of the changes we face. It's not just a challenge, but an imperative - a force that demands our attention and action.

The subtitle - "Trends, Prospects, and Policies on Fertility, Longevity, and Aging in ASEAN+3" - outlines the scope of our discussion. We'll be examining not just the current situation, but looking ahead to future prospects and discussing potential policy responses.

Slide 2: AMRO Introduction

Before we dive into the details, let me briefly introduce AMRO - the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s a trusted policy advisor to ASEAN+3 members, our mission is to contribute to the macroeconomic and financial resilience and stability of the region.

Our work encompasses surveillance, support for regional financing arrangements, technical assistance, and serving as a regional knowledge hub. In the context of today's discussion, our role is to share data-driven insights and policy recommendations.

Slide 3: Demographic Change as a Pressing Concern

This slide presents a stark reality: demographic change has been identified as one of the most pressing long-term concerns for the ASEAN+3 region. In our October 2023 survey, population aging is identified as key challenge to long-term growth, alongside trade and investment reconfiguration, climate change and technological change.

While today's seminar focuses on birth rates, it's crucial to contextualize this within the broader issue of aging. The macro impacts of declining birth rates primarily manifest in an aging population, affecting everything from economic growth to social structures. This broader perspective allows us to understand the full implications of our demographic shifts.

Slide 4: Stages in the Demographic Transition

Historically, societies move from a pre-transition stage with high birth and death rates, through early and late transition stages where death rates fall before birth rates, leading to population growth. Finally, they reach an advanced stage where both birth and death rates are low, leading to stable or declining populations.

What's striking about our region is the speed of this transition. Ten of our 14 economies are already in the advanced to late stages. This rapid transition leaves us less time to adapt compared to Western countries that underwent this process over centuries.

Moreover, the graph on the right shows a sobering projection: our region's total working population is expected to start shrinking by the second half of this decade. This isn't a distant future scenario - it's a reality we'll face within the next few years.

Slide 5: Population Pyramids

These population pyramids visually represent the dramatic shift in our demographic structure. This shift represents a fundamental change in the age structure of our societies. It means fewer young workers to support a growing elderly population, with profound implications for everything from economic growth to social services and cultural norms.

This RHS chart illustrates one of the key drivers of our demographic shift: declining fertility rates. The data here tells a compelling story. The region's average fertility rate is at 1.4 currently, below the replacement level of 2.1.

In fact, by 2035 all economies in the region are expected to have sub-replacement fertility rates.

Slide 6: Life Expectancy

While declining fertility is one side of the demographic coin, increasing longevity is the other. This slide shows the remarkabl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cross our region.

In 1980, life expectancy in our advanced transition countries was around 73 years. By 2050, it's projected to reach 85 years. That's an additional 12 years of life - a tremendous achievement.

The graph on the right adds another dimension to this discussion. It shows the concept of "healthy life expectancy" - the number of years a person can expect to live in full health. Japan, Singapore, and Korea lead not just our region, but the world in this metric.

This raises an important question: should we rethink our concept of "old age"? If people are living longer, healthier lives, perhaps our ideas about retirement and the later stages of life need to evolve as well.

Slide 7: Old Before Rich Challenge

At the current pace of aging, the problem of becoming old before becoming rich is a concern for many of the middle-income economies of the region.

What's striking here is the trajectory of countries like China, Thailand, and Malaysia. They're aging rapidly while still at relatively lower income levels compared to countries like Japan or Singapore.

This implies that economies could have less resources to manage the challenges that aging brings, especially if no offsetting policies are put in place.

Slide 8: Worldwide Fertility Decline

If we zoom out to give us a global perspective on fertility decline, what's clear is that this is not just an ASEAN+3 phenomenon - it's a worldwide trend.

Every region of the world has seen declining fertility rates since 1950.

This global context is important. It suggests that the forces driving fertility decline - urbanization, female education and workforce participation, changing social norms - are global in nature. It also means that we're not alone in facing these challenges, and there may be lessons we can learn from other regions' experiences.

Slide 9: Sustained Fertility Decline

This slide drives home a crucial point: once fertility rates fall below replacement level, they tend to stay there. No country that has seen its Total Fertility Rate (TFR) fall below 1.5 has managed to sustain a reversal back to replacement level.

Look at the trajectories of countries like Japan, Germany, and Italy. They've been below replacement level for decades, with only minor fluctuations. Even policy interventions and economic changes haven't managed to significantly alter these trends.

This persistence of low fertility rates has profound implications. It suggests that once societal norms and individual expectations shift towards smaller families, it's extremely difficult to reverse that trend.

Slide 10: Human Development and Fertility

Just in the last decade, experts widely thought that as countries developed, their fertility rates tended to decline first and then rebound at very high levels of development. That's no longer true.

However, what we're seeing now is different. Countries with very high Human Development Index scores - including many in our region - are seeing fertility rates fall well below replacement level. There's no sign of rates stabilizing or increasing as development progresses further.

Slide 11: Projected Fertility Rates

Future projections paint a sobering picture. This is from what I think is the most reliable projection on TFR that we currently have – based on recent worldwide collaborative research funded by the Gates Foundation.

Global TFR is expected to decline from 2.2 in 2021 to 1.8 by 2050 and 1.6 by 2100. By the end of the century, 198 out of 204 countries are projected to have below-replacement fertility.

For our region, the projections are even more dramatic:

1. East Asia's TFR is projected to decrease from 1.23 in 2021 to 1.16 by 2100
2. Southeast Asia is expected to see a sharp decline from 2.05 in 2021 to 1.35 by 2100

These projections underscore the long-term nature of our demographic challenge. We're not looking at a temporary dip that will correct itself.

Slide 12: Fertility Scenarios

Even under optimistic scenarios based on current evidence that we have, most countries in our region are not projected to return to replacement-level fertility. Education improvements and pro-natal policies show some positive impact, but the effects are modest.

For example, South Korea's TFR is projected to remain at 0.82 under the reference scenario, reaching only 1.01 by 2100 even in the most optimistic scenario.

This complexity highlights the need for comprehensive strategies to address these trends and adapt to a future of lower fertility.

Slide 13: Lee Kuan Yew Quote

"I cannot solve the problem, and I have given up. I have given the job to another generation of leaders. Hopefully, they or their successors will eventually find a way out."

These words from Lee Kuan Yew, spoken in 2013 about Singapore's declining fertility rate, are both sobering and challenging. Here was one of the most capable and far-sighted leaders of the 20th century, admitting defeat on this issue.

Lee's admission underscores several important points:

1. The intractability of the problem: Despite Singapore's resources and Lee's determined efforts, they couldn't reverse the fertility decline. Declining birth rate was described as his 30-year concern.
2. The long-term nature of the challenge: Lee recognized that solutions, if they come, will be the work of future generations.
3. The need for fresh thinking: By "giving up," Lee was essentially calling for new approaches and new ideas from future leaders.

For us today, Lee's words are a call to action. They remind us of the magnitude of our challenge, but also of the need for persistence, creativity, and long-term thinking in addressing it.

Slide 14: Policy Responses - Challenging Conventional Wisdom

To address our complex demographic challenges, we need comprehensive, multifaceted responses that often require us to challenge long-held conventional wisdom. Let's explore five key areas where we need to rethink our approaches:

1. **Aging Well, Aging Better:** Conventional wisdom sees aging as a burden. Instead, we need to maximize the longevity dividend from a life-cycle perspective. This means reimagining education, career paths, and retirement to adapt to longer, healthier lives. We must view our aging population not as a liability, but as a valuable resource.
2. **Rethinking Urbanization:** Urbanization has long been seen as a marker of development. However, it's also a significant driver of declining birth rates. We must challenge the notion that centralization is always beneficial. Instead, we should explore policies that revitalize rural areas and non-primary cities, creating more balanced demographic distributions and potentially more family-friendly environments.
3. **Redefining Family-Friendly Societies:** This is crucial. We need to create societies where having children is seen as compatible with career ambitions and modern lifestyles. This encompasses everything from workplace policies to cultural attitudes. One important point is this - our societies, especially in East Asia, have long prioritized education and career success. While admirable, this focus has contributed to declining birth rates and skyrocketing education costs. We need to create societies where having children is compatible with career ambitions and modern lifestyles. For instance, in Singapore, there's increased recognition on the true cost of education, which has become a significant deterrent to having children. Is becoming ever more

educated in a singular manner the only path to a successful and dignified life?

4. Human-Complementary Technology: The conventional narrative around technology often focuses on AI and robots replacing human jobs. However, in the face of shrinking workforces, we need to flip this narrative. The real question is: how can we leverage technology to enhance human productivity and fill gaps in our labor force? We need to develop and implement technologies that complement and support human workers, rather than replace them.
5. Productive Immigration: While immigration can be a contentious topic, carefully managed immigration policies could help address labor shortages and inject dynamism into our aging societies. This requires challenging xenophobic attitudes and fostering a more inclusive society. However, we must balance this with maintaining social cohesion, which requires rethinking our approach to cultural integration and social policy.

These policy areas are deeply interconnected, and success in one area can create positive spillovers in others.

The key takeaway is that addressing our demographic challenges isn't just about implementing new policies – it's about fundamentally rethinking many of our societal assumptions and priorities. We need to be willing to challenge conventional wisdom and explore new paradigms that better serve our changing demographic realities.

Slide 15: Rethinking Aging (optional)

This slide challenges us to fundamentally rethink our concept of aging. While it is true that aging is happening faster in the region than in many parts of the world, a point we made in our work is that we can substantially delay and dampen the economic headwinds from demographic changes.

This is because while the region is aging, the population is also living much longer and healthier than in the past. If we allow for people who would want to and are able, to continue to remain meaningfully productive at an older age, we could better reap dividends from this longevity—or the “longevity dividend”. By rethinking aging in this way, we can start to see our demographic shift not just as a challenge to be managed, but as an opportunity to be seized - a potential "longevity dividend."

We need to adopt a more fluid, dynamic view of life stages, opening up possibilities for flexible career paths, lifelong learning, and productive aging throughout our extended lifespans. The most important part is to avoid the mistake to think that aging is the problem of the old. We need to start thinking about aging at all ages.

Slide 16: Policy Considerations (optional)

Policy will play a key role to ensure that these dividends from longevity materialize, and we highlight in the report the need to shift from merely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of aging to maximizing the benefits of an older but healthier workforce.

This, of course, requires a multipronged, multifaceted approach that encompasses various aspects of public policy, including pension reforms, the use of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labor mobility.

Slide 17: Lant Pritchett Quote

To end my presentation, let me share this quote: "Nearly all (roughly 90 percent) of th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in actual fertility are accounted for solely by differences in desired fertility."

This quote from development economist Lant Pritchett is profound in its implications. It suggests that the fertility rates we observe are primarily due to the number of children people – women more specifically – actually want to have.

This insight serves as a summary of our previous policy discussions and emphasizes the key point of declining Total Fertility Rate (TFR). It has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for our policy approach:

1. The importance of cultural factors: If desired fertility drives actual fertility, then we need to understand and potentially influence the cultural norms and individual preferences that shape these desires.
2. Limitations of financial incentives: While child allowances and other financial incentives may help, they may not be sufficient if they don't address the underlying reasons why people are choosing to have fewer children.
3. Need for holistic approaches: Policies need to address not just the financial aspects of having children, but also work-life balance, gender equality, and societal attitudes towards family and childrearing.
4. Long-term perspective: Changing desired fertility is likely to be a slow process, requiring sustained effort over generations.

For policymakers, this means we need to think beyond traditional family planning policies. We need to consider how our economic structures, work cultures, and social norms influence people's desires and decisions about family size.

Slide 18: Nagi Example

Now, let's turn to a ray of hope - the story of Nagi, a small town in Japan that has managed to reverse its fertility trend. This is a remarkable achievement in a country that has long struggled with low birth rates.

Nagi increased its Total Fertility Rate from 1.4 in 2005 to 2.7 in 2021 - well above the replacement level. How did they achieve this?

1. Local and community-driven approach: Nagi's success wasn't driven by top-down national policies, but by local initiatives tailored to the community's needs.
2. Family-first policies: The town implemented a range of supportive policies including financial incentives, child-rearing support, and housing assistance.
3. Cultural shift: Perhaps most importantly, Nagi fostered a community culture that values large families. Having children became seen as desirable and supported by the community.
4. Long-term commitment: This wasn't a quick fix. Nagi sustained its efforts for over 20 years, allowing for generational change.

The Nagi example is encouraging because it shows that with the right approach, it is possible to influence fertility trends positively.

However, we must be cautious about generalizing too much from a single small town.

Slide 18 again: Conclusion

As we conclude, let's reflect on the magnitude of the demographic challenge we face, but also on the potential paths forward.

The demographic transition in our region is unprecedented in its speed and scale. It presents significant challenges to our economic growth, fiscal sustainability, and social structures. However, it also offers opportunities if we can successfully adapt to and harness the potential of longer, healthier lives.

Our response must be comprehensive, encompassing everything from labor market reforms to cultural shifts. We need to:

1. Rethink our concepts of aging and life stages
2. Create truly family-friendly societies
3. Leverage technology to support human productivity
4. Foster regional cooperation and knowledge-sharing

But let me leave you with one final, crucial point: Every small increase in fertility rates buys us valuable time. If we could raise Korea's fertility rate to Japan's level (1.2-1.4), we could potentially extend the timeline of population decline from 3 generations to 5-6. If we could reach Germany's level (1.5-1.6), that could extend to 12-13 generations.

These extensions translate to hundreds and hundreds of years - valuable time for us to adapt, innovate, and get things right. It's a powerful reminder that even incremental progress can have profound long-term effects.

The demographic imperative is upon us, but our future is not predetermined. With thoughtful policies, regional cooperation, and a willingness to rethink old paradigms, we can navigate this transition and build societies that thrive with our new demographic realitie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Gamsahabnida.

<인구학적 긴급과제(The Demographic Imperative)>

— ASEAN+3의 출산율, 장수, 고령화에 대한 추세, 전망 및 정책

슬라이드 1: 서론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이 신성한 장소에 와서 우리 아시아 지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ASEAN+3의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긴급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인구학적 긴급과제>"라고 제목을 적었는데, 이는 우리가 직면한 변화의 긴박함과 불가피성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필수성이며, 우리가 주목하고 행동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동력입니다. 부제인 "ASEAN+3의 출산율, 장수, 고령화에 대한 추세, 전망 및 정책"은 토론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을 내다보고 잠재적인 정책 대응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슬라이드 2: AMRO 소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AMRO(ASEAN+3 거시경제 연구 사무소)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ASEAN+3 회원국의 신뢰받는 정책 고문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이 지역의 거시경제 및 금융 회복력과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무에는 경제적 위험 감시, 지역 재정지원, 기술지원, 지역 지식허브 역할이 포함됩니다. 오늘 논의할 맥락에서 우리의 역할은 데이터 기반 통찰력과 정책권장사항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3: 시급한 우려로서의 인구 변화

이 슬라이드는 엄중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인구 변화는 ASEAN+3 지역의 가장 시급한 장기적 우려 중 하나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조사에서 인구 고령화는 무역 및 투자 제편, 기후 변화, 기술 변화와 함께 장기적 성장에 대한 핵심 과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출산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고령화라는 더 광범위한 문제 내에서 이를 맥락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율 감소의 거시적 영향은 주로 고령화 인구에서 나타나 경제 성장에서 사회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더 광범위한 관점을 통해 인구통계적 변화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4: 인구 통계적 전환의 단계

역사적으로 사회는 (1) 출산율과 사망률이 높은 전환 이전 단계에서 (2) 사망률이 출산율보다 낮아지는 초기 및 후기 전환 단계를 거쳐 인구가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3)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고급 단계에 도달하여 인구가 안정되거나 감소합니다.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러한 전환의 속도입니다. 14개 경제 중 10개는 이미 선진(1)에서 후기단계(3)에 와 있습니다.

이 급속한 전환 때문에 수세기 동안 이 과정을 거친 서구국가들에 견줘 적응시간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그래프는 냉정한 예측을 보여줍니다. 우리 지역의 총 근로인구는 이 10년의 후반에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직면하게 될 현실입니다.

슬라이드 5: 인구 피라미드

이 인구 피라미드는 우리 인구구조의 극적인 변화를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변화는 우리 사회 연령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는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부양할 젊은 근로자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성장에서 사회서비스 및 문화적 규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RHS 차트는 우리 인구 변화의 주요 원동력 중 하나인 출산율 감소를 보여줍니다. 여기의 데이터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지역의 평균 출산율은 현재 1.4로 대체 수준인 2.1보다 낮습니다.

사실, 2035년까지 이 지역의 모든 경제는 대체 수준 이하의 출산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슬라이드 6: 기대수명

출산율 감소가 인구통계학적 동전의 한 면이라면 수명 증가는 다른 한 쪽 면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우리 지역 전체에서 기대수명이 현저히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1980년,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선 국가들의 기대수명은 약 73세였습니다.

2050년까지는 85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종전보다 무려 12년의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엄청난 성과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 논의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합니다. "건강한 수명 기대"라는 개념을 보여줍니다.

즉, 사람이 완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연 수를 보여줍니다.

일본, 싱가포르, 한국은 이 지표에 관한 한 우리 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노령"에 대한 개념을 재고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은퇴와 삶의 후반 단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슬라이드 7: 부자가 되기 전에 늙는 문제

현재의 고령화 속도에서 부자가 되기 전에 늙는 문제는 이 지역의 많은 중산층 경제권에 우려 사항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의 궤적입니다. 이들은 일본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가 고령화의 도전을 관리할 자원이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고령화를 상쇄하는 정책(offsetting policy)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슬라이드 8: 전 세계 출산율 감소

출산율 감소에 대한 글로벌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확대해보면, 분명한 것은 이것이 ASEAN+3 현상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라는 것입니다.

1950년 이래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출산율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맥락은 중요합니다.

이는 출산율 감소를 주도하는 힘, 즉 도시화, 여성 교육 및 노동력 참여, 사회적 규범의 변화가 본질적으로 글로벌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는 우리 아시아가 이러한 과제에 직면한 유일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지역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9: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이 슬라이드는 중요한 요점을 강조합니다. 출산율이 대체출산율(2.1명)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총 출산율(TFR)이 1.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는 나라는 대체수준으로의 역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의 궤적을 살펴보세요. 수십 년 동안 대체 수준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약간의 변동만 있었습니다. 정책 개입과 경제적 변화조차도 이러한 추세를 크게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낮은 출산율의 지속은 심오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기대가 더 작은 가족으로 바뀌면 그 추세를 역전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슬라이드 10: 인간 개발과 출산율

지난 10년 동안 전문가들은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출산율이 먼저 감소한 다음 매우 높은 개발 수준에서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널리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다릅니다. 아시아에도 많은 국가들이 포함된 '인간개발지수 점수가 매우 높은 국가들'의 출산율이 대체수준보다 훨씬 낮아지고 있습니다. 개발이 더 진행됨에 따라 출산율이 안정 되거나 증가할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11: 예상 출산율

미래 예측을 보여주는 그래프는 냉혹합니다. 이는 게이츠 재단에서 자금을 지원한 최근의 전 세계 협력 연구를 기반으로 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계출산율(TFR)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합계출산율(TFR)은 2021년 2.2명에서 2050년까지 1.8명, 2100년까지 1.6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기말인 2100년까지 204개국 중 198개국이 대체출산율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의 예측은 훨씬 더 극적입니다.

1. 동아시아의 TFR은 2021년 1.23에서 2100년까지 1.16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동남아시아는 2021년 2.05에서 2100년까지 1.35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예측은 인구통계적 문제의 장기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스스로 교정될 수 있는, 그런 일시적 하락이 아닙니다.

슬라이드 12: 출산율 시나리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에 근거한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우리 지역의 대부분 국가는 대체출산율 수준의 출산율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교육 개선과 출산축진정책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TFR은 기존 시나리오에서 0.82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2100년까지 1.01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이러한 추세에 대처하고 출산율이 낮은 미래에 적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슬라이드 13: 리관유 인용문

"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다른 세대의 리더에게 맡겼습니다. 바라건대, 그들 또는 그들의 후임자들이 결국 탈출구를 찾을 것입니다."

2013년 싱가포르의 출산율 감소에 대해 리관유가 한 이 말은 냉정하면서도 도전적입니다. 20세기에서 가장 유능하고 선견지명이 있는 리더 중 한 명이 이 문제에 대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리의 인정은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을 강조합니다.

1. 문제 자체가 난제: 싱가포르의 자원과 리관유의 단호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감소를 역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리관유는 출산율 감소를 '30년간의 걱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과제의 장기적 특성: 리 총리는 해결책이 나온다면 미래 세대의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3. 새로운 사고방식의 필요성: 이 대통령은 자신이 '포기'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미래 리더들이 새로운 접근 방식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대통령의 말은 행동 촉구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도전의 규모를 상기시켜 주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끈기, 창의성, 장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슬라이드 14: 정책 대응 - 기존 지혜에 도전

복잡한 인구통계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종종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기존의 지혜에 도전해야 하는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한 노화, 더 나은 노화 : 기존의 지혜는 노화를 부담으로 봅니다. 대신, 우리는 수명 주기 관점에서 장수 배당금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즉, 더 길고 건강한 삶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 경력 경로, 은퇴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령 인구를 부채가 아니라 귀중한 자원으로 여겨야 합니다.

2. 도시화 재고: 도시화는 오랫동안 개발의 지표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출산율 감소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중앙집권화가 항상 유익하다는 개념에 도전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농촌 지역과 비주요 도시를 활성화하고, 보다 균형 잡힌 인구 분포와 잠재적으로 보다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2. 도시화 재고: 도시화는 오랫동안 개발의 지표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출산율 감소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중앙 집권화가 항상 유익하다는 개념에 도전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농촌 지역과 비주요 도시를 활성화하고, 보다 균형 잡힌 인구 분포와 잠재적으로 보다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3. 가족 친화적 사회 재정의: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갖는 것이 직업적 야망과 현대적 라이프스타일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직장 정책에서 문화적 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 하나는 우리 사회, 특히 동아시아 사회는 오랫동안 교육과 직업적 성공을 우선시해 왔다는 것입니다. 감탄할 만한 일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집중은 출산율 감소와 교육 비용 급등에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갖는 것이 직업적 야망과 현대적 라이프스타일과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교육의 진정한 비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자녀를 갖는 데 상당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독특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성공적이고 품위 있는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일까요?

4. 인간을 보완하는 기술: 기술에 대한 기존 이야기는 종종 AI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노동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뒤집어야 합니다. 진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의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간 근로자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고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5. 생산적인 이민: 이민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일 수 있지만 신중하게 관리되는 이민 정책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고령화 사회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혐오적 태도에 도전하고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육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하는 것과 균형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통합과 사회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분야는 깊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한 분야에서 성공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인구 통계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회적 가정과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지혜에 도전하고 변화하는 인구 통계적 현실에 더 잘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탐구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슬라이드 15: 노화 개념의 재고(선택 사항)

이 슬라이드는 노화에 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역에서 노화가 세계 여러 지역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작업에서 지적한 요점은 인구통계적 변화로 인한 경제적 역풍을 상당히 지연시키고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시아 지역이 노화되고 있지만 인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도 의미 있게 생산적으로 지내고 싶어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이 장수에서 더 나은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 바 '장수의 이익'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노화를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구통계적 변화를 관리해야 할 과제일 뿐만 아니라 잡을 수 있는 기회, 즉 잠재적인 '장수의 이익'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단계에 대한 보다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관점을 채택하여 유연한 경력 경로, 평생학습 및 연장된 수명에 조응하는 생산적 노화의 가능성을 열어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화가 노인의 문제라는 잘못된 생각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연령대에서 노화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16: 정책 고려 사항(선택 사항)

정책은 장수에서 오는 이러한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보고서에서 노화의 과제에 단순히 대응하는 것에서 '나이가 많지만 건강한 노동력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연금개혁, 기술 활용, 노동이동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의 공공 정책을 포괄하는 다각적이고 다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슬라이드 17: 란트 프리젯 인용문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기 위해 이 인용문을 공유하겠습니다. "실제 출산율에서 국가 간 차이의 거의 대부분(대략 90%)은 희망출산율(원하는 출산율)의 차이로만 설명됩니다."

개발경제학자 란트 프리젯의 이 인용문은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이는 우리가 관찰한 출산율이 주로 사람들이(특히 여성) 실제로 원하는 자녀 수 때문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통찰력은 이전 정책 논의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줍니다. 합계출산율(TFR) 감소의 핵심 요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정책 접근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 원하는 출산율이 실제 출산율을 주도한다면 이러한 욕구를 형성하는 문화적 규범과 개인적 선호도를 이해하고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습니다.

2. 재정적 인센티브의 한계: 자녀 수당과 기타 재정적 인센티브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자녀를 덜 낳기로 선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다루지 않는다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전체론적 접근 방식의 필요성: 정책은 자녀를 갖는 것의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 성 평등, 가족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태도도 다루어야 합니다.

4. 장기적 관점: 원하는 출산율을 바꾸는 것은 느린 과정일 가능성이 높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 입안자에게 이는 전통적인 가족 계획 정책을 넘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경제 구조, 업무 문화, 사회적 규범이 사람들의 욕구와 가족 규모에 대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18: 일본 나기 마을의 사례

이제 희망의 빛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산율 추세를 역전시킨 일본의 작은 마을 나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나라에서 놀라운 성과입니다.

나기는 2005년 1.4명 수준이던 합계출산율을 2021년 2.7명으로 크게 높였습니다. 이는 대체출산율(2.1명)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를 달성했을까요?

1. 지역 및 커뮤니티 중심 접근 방식: 나기의 성공은 상향식 국가 정책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요구에 맞게 조정된 지역 이니셔티브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2. 가족 우선 정책: 이 마을은 재정적 인센티브, 육아 지원, 주택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3. 문화적 변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기 마을이 대가족을 중시하는 지역문화를 육성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갖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고 지역 사회에서 지원되었습니다.

4. 장기적 현상: 나기 마을의 출산율 회복은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은 20년 이상 노력을 지속하여 세대 간 변화를 허용했습니다. 나기 마을 사례는 올바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출산율 추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일 소도시에서 너무 많은 것을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18 다시: 결론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인구학적 도전의 규모와 잠재적인 전진 경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학적 전환은 속도와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 재정적 지속 가능성, 사회 구조에 상당한 과제를 안겨줍니다. 그러나 더 길고 건강한 삶의 잠재력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기회도 제공합니다. 우리의 대응은 포괄적이어야 하며 노동시장개혁에서 문화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노화와 인생 단계에 대한 개념을 재고합니다.
2. 진정으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를 만듭니다.
3. 인간의 생산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합니다.
4. 지역 협력과 지식 공유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 약간만 증가하더라도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을 일본 수준(1.2-1.4)으로 높일 수 있다면 인구 감소 기간을 3세대에서 5-6세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수준(1.5-1.6)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12-13세대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은 수백, 수백 년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적응하고, 혁신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점진적인 진전조차도 장기적으로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인구학적 필수가 우리에게 닥쳤지만, 우리의 미래는 미리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려 깊은 정책, 지역 협력, 오래된 패러다임을 재고하려는 의지로, 우리는 이러한 전환을 헤쳐나가고 새로운 인구학적 현실과 함께 번영하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베트남

팜 민 투이(Pham Thi Minh Thuy)

호치민 국가·지역 정치아카데미 교수



[인터뷰]

팜 민 투이(Pham Thi Minh Thuy)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지역정치아카데미 교수

— 베트남 인구가 1억명을 넘었어? 곧 1억 명이 되지 않나요?

▲ 베트남 통계총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 중순 베트남 인구 규모가 1억 명에 도달했습니다. 세계 인구 순위 15위, 아시아에서는 8위,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다음으로 3위를 기록했죠. 전체적으로 베트남은 인구 강국이 됐어요.

— 그런데 왜 베트남 사람들은 요즘 인구에 대해 걱정하죠? 도대체 무슨 걱정인가요?

▲ 베트남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고령화 문제를 고민하고 있죠. 베트남 노인 수와 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요.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 전체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 그룹에 속합니다.

노인 비율이 전체인구 중 10%에서 20%로 증가하는데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호주는 73년, 미국은 69년이 걸렸는데, 베트남은 25년만 있으면 도달합니다. 수천만 명의 노인들이 소득을 보장받고 세대 간 조화를 이루는 우호적인 사회 환경에서 건강하게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거죠.

— 베트남의 경우 소도시는 여전히 출산율이 높지만 하노이나 호치민 등 대도시에서는 합계출산율이 급락, 전국 합계출산율 2.0이 무너졌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 베트남 인구정책을 주도하는 보건부 추정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2.01명이던 베트남의 총 출생률이 2023년 들어 1.95로 떨어졌어요. 남동부와 메콩강 삼각주는 비상이 걸린 지역으로, 출생률이 1.5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죠. 호치민시 출생률은 1.27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여성 1인당 2.1명의 자녀를 낳는 것이 목표였지만, 목표에 미치지 못했죠. 인구 당국의 마이 트롱 손(Mai Trung Son) 국장은 “출생률 저하가 세계적 추세이지만, 베트남은 세계보다 빠르며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도시 여성이 1.7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다면, 지난 2년 동안 출산율은 1.7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출생률이 2.4명에 육박했던 농촌 지역의 경우 2023년 2.1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많은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 도시에서 더욱 심각하지만, 지방도 저출생 비상이라는 점은 몰랐어요. 빠른 도시화로, 출생률 감소는 물론이고 인구감소까지 불러오는 것 아닐까요?

▲ 출생률 시나리오인 통계청 인구예측에 따르면, 베트남의 평균 인구증가율은 2069년까지 0에 도달할 전망이다. 저출생이 현실화되는데 35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2069년에는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현실에 직면한다는 시나리오죠.

마이 트롱 손씨는 “베트남이 2.1명을 유지한다면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며 안정을 이루지만, 지금 추세라면 2500년까지 현재 응에안(乂安) 성(省) 인구 수준인 360만 명에 그치고, 2700년이면 전국 인구가 수만 명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레 탄 둥(Le Thanh Dung) 보건부 인구총국장은 출생 감소로 이어지는 여러 이유 중 “매우 자연스러운 사회적 이유”도 있다고 했죠.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도시화 과정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젊은이들이 실새 없이 도시의 삶에 몰입하게 된다는 거죠.

— 베트남 학계에서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있나요?

▲ 출생률은 가계에서 볼 때 자녀를 적게 낳거나 많이 낳는 선택이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재생산의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낮은 출생률은 인적자원, 특히 젊은 노동자를 감소시켜 사회경제적 발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낮은 출생률은 노동력 부족을 의미하며, 외동 자녀 세대가 장차 인구고령화에 따른 초고령사회를 부양할 책임이 될 것이라는 의미죠.

베트남 정부는 출생률이 낮은 지역에서 그동안 출생률을 낮추는 정책을 재검토,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가족과 지역사회는 점차 ‘2자녀 장려정책’을 공포하고 시행하고 있죠. 자녀출생 관련 각종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결혼 및 가족 서비스 제공, 임신 및 출산 관련 여성 지원, ‘2자녀 갖기 운동’ 지원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지난해 ‘베트남 인구의 날(12월 26일)’을 맞아 ‘인구에 관한 2023 국가 행동의 달(National Action Month on Population 2023)’을 시행하면서 “가정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혼 전 상담 및 건강 검진에 참여하세요”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 베트남도 도시에서 출생률이 유독 낮던데요.

▲ 대도시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은 자녀 양육비 증가와 비싼 생계비, 일자리 경쟁 격화 등 때문이죠. 자녀 양육비가 매우 많이 들고,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양육이 더욱 어려워요. 학비도 비싸고요. 젊은 이들 대부분은 자기발전을 위해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도시로 나갑니다.

돈을 벌더라도 주택과 결혼, 취업 지원 또는 대학원 등 고등교육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합니다. 자동화로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높은 실업률로 ‘괜찮은 일자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취업 자체도 어렵지만 취업하더라도 안정적 직업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재교육에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밖에 ‘남아선호사상’도 불평등한 부부관계를 심화시켜 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성이 이혼하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고, 노령에 따른 건강 악화, 노동시간 부족 등으로 경력 단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 저출생 문제를 고민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부여가 낮아졌음을 호소합니다.

▲ 젊은 세대에게 가족의 의무와 어머니의 진정한 행복, 시민의 책임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법으로 강요될 수 없지만, 자발성은 사랑과 헌신에서 나온다.

가령 베트남에서는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 부모 학대 금지, 부모의 양육 의무 등에 대한 최소한의 수준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죠. 부모 봉양과 자녀 부양을 위한 물질(금전)적 기준도 어느 정도 제시되고 있어요.

법을 초월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마음의 평화를 갖고 일할 동기를 부여하며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교육과 공동체적 책임, 인종 보호, 문화적 신념 등이 수반돼야 합니다.

— 교수님은 몇 명의 자녀를 두셨나요? 학자로서, 여성으로서,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자녀출생에 대해 어떻게 조언하고 싶으세요?

▲ 나는 아들과 딸, 2명의 자녀를 낳아 키워왔어요. 저는 젊은이들이 가급적 조기출산 하길 권하고 싶어요. 이른 나이에 출산하는 것이 남녀 모두의 출산 능력, 건강한 자녀 출생 모두에 좋지 때문이죠. 물론 30세 이전에 2명의 아이를 낳으면 산모가 힘들죠. 그래도 35세 이전에 2명의 아이를 낳는 것이 정상이라고 봐요. 자녀 수는 2~3명 이상이 좋다고 생각해요.

— 베트남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그 성과는 무엇입니까?

▲ 베트남 정부는 투자 자원의 한계가 많은 상황에서 저출생 지역의 출생률 증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오 홍 란(Dao Hong Lan) 보건부 장관은 국가적으로 인구노령화에 적응한 경험이 없음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경험과 관련 기술을 공유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11일 수도 하노이에서 보건부와 UN인구기금(UNFPA)이 '세계 인구의 날' 공약 이행 과정에서 전 세계의 진행 상황을 되돌아보는 국제회의를 열었죠. 베트남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통계의 맥락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논의했습니다. 성적 건강과 생식 건강 및 권리 등의 주제도 포함됐습니다.

2024년, 베트남은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기구의 실행프로그램을 시행한 지 30년 만에 사회경제적 발전을 거뒀습니다. 기아 퇴치와 빈곤 개선, 최근에는 삶의 질 개선 등 인구 문제에서 적잖은 성과를 거뒀죠.

같은 기간 지역과 계층 간 사회경제적 지위 격차를 줄이는 불평등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인간개발지수가 세계 다른 나라에 견줘 크게 향상돼 세계평균 수준에 도달했죠. 영양실조와 산모사망률, 유아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했고요. 국민 평균수명은 1993년 65.5세에서 2020년 74.5세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 지금과 같은 성공 추세라면, 베트남의 인구정책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럴까요?

▲ 많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현재와 미래의 베트남의 삶과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려움과 과제는 여전히 많아요. 2.1명 출생률 목표 유지와 고령화 대응이 대표적인 어려움이죠.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성비 불균형 위험, 조혼과 근친결혼 극복도 더딘 상황이고요. 청소년의 임신율은 여전히 높으며, 특히 북부 산악 지역과 중부 고원 지역에서는 더 심해요. 여전히 가족계획이 필요한 지역도 있죠. 오지, 소수민족 지역 주민들의 신장, 체력, 삶의 질은 여전히 도시 및 삼각주 지역에 견줘 한계가 있어요.

— 그렇다면 구체적인 정책 솔루션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현재 작성 중인 ‘인구법’ 법안에는 출산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에서 두 자녀 출산 장려를 위해 4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여성이 둘째 아이를 낳으면 일회성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방안이죠. 유아·초등학생 수업료 감면과 학습비 지원 같은 게 포함됩니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기관, 조직 및 기업은 보건 분야의 사회화를 장려하는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부부가 두 자녀를 낳고, 자녀를 잘 돌보고 양육, 가족 간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적합한 환경과 공동체를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 및 기타 조치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적 책임을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되고요.

두번째는 ‘국정홍보’입니다. 응우옌 딘 쿠(Nguyen Dinh Cu) 교수에 따르면, 합계출생률 2.1명 수준으로 되돌리는 솔루션을 찾으려면 정책을 변경하고 보다 유연하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죠. 인구정책은 전환이 필요하며, 인구정책이 출산율 감소와 가족계획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의 사고방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세번째, 출생률 감소 기간의 정책들은 즉각 폐지하고, 출생률 제한이 필요한 지역은 자체 정책을, 출생률 증가가 필요한 지역은 자체 정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별 구체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수 규제와 출생 증가를 법으로 장려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것은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는 모든 부부의 문제이지만,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대체 출산율을 유지하고 지역 간 합리적인 출산율을 보장하여 미래에 베트남의 인구 규모가 영토에 적합하고 연령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생산가능인구의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하면 ‘황금인구’ 구조가 연장될 겁니다. 이는 특히 인구고령화 전환을 늦추고, 인구의 질을 개선할 겁니다.

— 베트남의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 외국인에게 베트남 시민권을 부여하고 현 베트남 시민으로 대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출생률과 무관하게 베트남은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항상 외국인들에 대해 친절하고 우호적이며 문명화된 국가입니다. 베트남 법률은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고 베트남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합니다. 물론 베트남 시민의 책임과 의무도 생기죠. 법률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베트남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지표로 볼 때 한국의 저출생이 지구촌에서 가장 심각하다. 베트남과 일본, 중국 중 한국을 제칠 나라가 있을까요?

▲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개입정책도 달라, 어느 나라가 출생율이 가장 낮을지 확신할 수는 없죠. 지표상 지금은 한국이 가장 심각한데, 한국 정부가 적절한 정책과 국민의식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은 현재 가장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적자원의 양과 질과 관련된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한국은 분명히 잘 극복할 겁니다.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중 국

저우위보

〈인민망〉 한국지사 대표



중국 저출생 문제와 극복을 위한 노력

저우위보 〈인민망〉 한국지사 대표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중국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책에 대해 여러분과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중국 경제는 ‘인구 보너스’ 덕분에 고속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중국의 총 인구가 정점에 이른 이후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전례 없는 수요 측 도전 과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중국 경제 성장에 큰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1. 저출산 현황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말 중국 인구는 14억 967만 명이며, 연간 출생 인구는 902만 명으로 출생률은 6.39%입니다. 사망자 수는 1,110만 명, 사망률은 7.87%이며, 자연 인구 증가율은 -1.48%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전체 인구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입니다.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은 출생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중국의 출생 인구 수는 1,782만 명에서 902만 명으로 49% 감소했습니다.

출생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중국은 점진적으로 출산 정책을 조정하고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는 “인구 발전 전략을 최적화하고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을 구축해 출산, 양육 및 교육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저출산 원인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출생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이며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임 여성의 감소

가임 여성, 특히 출산이 활발한 연령대의 가임 여성 규모가 뚜렷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20~34세의 가임 여성은 연평균 340만 명 줄었으며,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473만 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출생 인구의 감소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2)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 관념 변화

중국의 수천 년 전통 윤리에서 ‘남자와 여자는 적령기가 되면 마땅히 결혼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 경제와 문명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전통적인 결혼 및 출산 관념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대생과 00년대생은 새로운 결혼 및 출산의 주체로서 대부분 도시에서 성장하고 일하며, 교육 기간이 길어지고 취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3) 출산, 양육 및 교육 비용이 비교적 높음

경제 사회 발전에 따라 주택, 교육, 취업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출산, 양육 및 교육의 비용이 계속해서 높아지며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는 경제적 부담, 아이 돌봄, 여성의 직업 발전 등입니다. 현재 관련 정책 시스템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아 “관련 지원 정책이 잘 연계되지 않고, 보육 등 공공 서비스가 완비되지 않아 많은 젊은 세대가 출산 문제에 대해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저출산 대응책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정책 지원, 고용 보장, 경제적 지원, 보육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책과 조치를 취하며 저출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정책 지원

‘독자 양부모 2자녀 정책’과 ‘독자 부모 2자녀 정책’의 시범 시행에 이어 2016년 ‘전면적 2자녀 정책’을 공식적으로 시행했고, 2021년에는 ‘3자녀 출산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지원을 통해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 고용보장

(1) 유급 보육 휴가

2021년 8월부터 중국 각지에서는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부가 각각 연간 유급 보육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정하거나 새로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과 상하이시는 5일, 헤이룽장성과 허베이성, 장시성, 쓰촨성, 구이저우성, 저장성, 후베이성 등 지역은 10일, 산시성, 칭하이성, 간쑤성의 경우 15일의 보육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각 성 및 도시에서 지방 지원 정책을 연이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인과 육아 간의 갈등을 줄이고 가정에서 더 많은 자녀를 낳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출산 휴가와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출산 휴가를 확대했으며, 확대 후 출산 휴가는 보통 158일 또는 188일입니다. 장시성, 안후이성, 충칭시 등에서는 배우자 출산 휴가(간호 휴가)를 확대해 최대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지원 확대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2021년 7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출산 정책 최적화 및 인구 장기적 균형 발전 촉진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각급 정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출산 지원 정책 및 장려 제도를 더욱 보완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 보조금과 관련해 현재 각지의 일반적인 시행 방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조금 형태를 통합하고, 보조금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며, 출산 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광범위한 가정 육아 지원의 기본 제도를 형성하고,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의 공공화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쓰촨성 판즈화시는 '인력 자원 집결 촉진을 위한 16가지 정책 조치'를 발표하고 정책에 따라 둘째와 셋째 자녀를 출산한 현지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자녀당 500위안의 육아 보조금을 3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직접적인 육아 보조금을 통해 출산을 장려한 첫 번째 도시입니다.

4) 보육 서비스 시스템 구축

2019년 5월, 국무원 판공청은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서비스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고 지방 정부가 보육 기관을 늘려 가정의 양육 비용을 줄일 것을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2023년 3월, '베이징시 보육 서비스 시스템 구축 3개년 행동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방안은 2025년까지 베이징시의 공공 보육 서비스가 중심 지역 전역에 제공되고 동(향진) 단위 적용률이 85% 이상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4. 발전 목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중국의 발전 목표는 출산 친화적 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당의 20기 3중전회 결정’에서는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과 장려 제도를 개선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건설을 추진할 것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출산 휴가 제도를 개선하며, 출산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고, 기본 출산 및 아동 의료 공공 서비스 수준을 높이며, 개인소득세 공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 보육 서비스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고용주가 운영하는 보육 기관, 지역 사회 내 보육 서비스, 가정 보육 등 다양한 모델의 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구 문제는 항상 중국이 직면해 온 전반적이고,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함께 인구 고령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실버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최근 단계적으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 9,700만 명에 이르고, 평균 기대 수명은 78.6세입니다. 기대 수명과 건강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일부 노인의 사회 참여 의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노동력 공급을 늘리고,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며, 노동자들의 다양한 퇴직 요구를 충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는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각 국가는 자국의 상황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중국은 인구 규모가 크고 인구 수가 많다는 기본적인 특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인구의 고품질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정책, 기업, 사회, 개인 등 여러 측면의 힘을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인구 보너스’를 ‘인재 보너스’로 전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식 현대화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이로써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문서의 내용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일본

미키토 마수다(Mikito Masuda)

고마자와 대학교 교수(경제학)



Q1.(이상현) :

産業化、都市化が進んでいる先進国で低出生が顕著な理由について、具体的な因果関係を用いて説明して欲しい。(産業化,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에서 저출생이 뚜렷합니다.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A1. (미키토 마쓰다 (Mikito Masuda) 고마자와 대학교 교수(경제학))

これについては、人口転換を用いて説明することができます。人口転換とは、経済発展に応じた出生率と死亡率の変化を示したのですが、ある程度豊かになると出生率が低下することが知られています。(통상 경제 발전에 따른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를 나타내는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 이론으로 설명되죠. 산업화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출생률이 저하됩니다.)

まず、豊かになったことで子どもの質を高めたいという動機が生じ、その結果出生率が低下しました。子どもの質と量を両立す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子どもの数を減らすことで子どもの質を高め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우선, 풍요로워지면 내 아이의 질을 높이고 싶어지죠. 그런데 많은 자녀를 낳고 모두 질적으로 우수하게 키우긴 힘들죠. 자녀 수를 줄여야 질을 높일 수 있는거죠. 그래서 출생률이 저하됐죠.)

しかし、その後さらに豊かになると、子どもの質とは無関係に出生率が低下するという現象も生じました。この背景として、価値観の変化を挙げることができます。すなわち、子どもをあまり持ちたくないという価値観の変化が起こり、結果として出生率が減ったのです。経済学では、子どもを持つこと自体から効用(すなわち満足度)を得られると考えられているので、この価値観の変化は、この子どもの効用自体が減少していることを示すものです。(그런데 그 후 더 삶이 풍요로워지면 어떨까요? 자녀의 질과 무관하게 출생률이 저하된다는 겁니다. 이는 가치관이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즉, 아이를 많이 갖고 싶지 않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출생률이 줄어듭니다. 경제학에서는 자녀가 있는 것

것 자체로 효용(만족도)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 변화는 자녀로부터 얻는 효용 자체가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また、日本や韓国のように、女性の社会進出が進んだにもかかわらず社会経済システムが十分でない国では、女性が出産・育児と仕事を両立させることが難しく、機会費用が上昇し、その結果出生率が低下しました。
(또한 일본이나 한국과 같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진행됐음에도 사회경제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여성이 출산·육아와 일을 양립시키기가 어렵고 기회비용이 상승한 결과 출생률이 감소했습니다.)

Q2.

韓国の少子化対策は、関連のない分野に対しても予算を配分したという評価がある。日本では、予算を効率的に用いて、効果的な少子化対策を実施してきたと考えるか?日本の少子化対策の問題点と改善

内容を教えて欲しい。(한국은 관련 없는 분야에 저출산 대책 예산을 책정했다고 비판받았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저출산 대응예산은 효율적으로 편성돼 저출산 대책에 효과적이었나요? 다른 문제도 있나요?)

A2.

残念ながら、日本の少子化対策が十分に効率的かつ効果的に行われてきたとは言いがたい状況です。また、十分な改善が行われているとも言えないと思います。確かに、日本の少子化対策は拡充されてきましたが、まだいくつか問題点があります。(불행하게도, 일본의 저출산 대책이 충분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충분한 개선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죠. 확실히,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보완돼 왔지만, 아직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第一に、現在、日本政府は児童手当を拡充しようとしています、児童手当は使い道が限定されていません。そのため、子育て費用の負担軽減以外のためにも使われる可能性があるため、効果は限定的だと考えられます。教育費負担の軽減のように、子育て費用の負担軽減に直結する施策が重要です。(우선, 현재 일본정부는 아동수당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아동수당은 용처가 한정돼 있지 않죠. 육아비용에 보태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제한적일 겁니다. 교육비부담 경감처럼, 육아비용 경감에만 쓰도록 해야 합니다.)

第二に、日本や韓国のように結婚が出産の重要な要因である国では、婚姻率の動向が少子化にとって 極めて重要です。すなわち、婚姻率の低下は少子化の大きな要因です。しかし、日本では結婚支援を十分に行ってきませんでした。結婚したくてもできない人達に対する支援は重要です。ここで特に重要なのは、若者の結婚支援です。なぜなら、相対的に見て高年齢で産める子どもの数は限られているのに対し、若者は相対的に多くの子どもを産めるからです。したがって、若者に対する結婚支援は極めて重要です。不安定就労の解消や出会いの場の提供といった施策の促進を通じて結婚支援を行うことができると 思います。ただし、出会いの場の提供がどこまで婚姻数を増やすかについては不明確な点もあるため、その点について検証を進める必要があります。ただし、そのためには結婚相談所やマッチングアプリ等 でマッチングしたカップルの成婚率を調べる必要がありますが、現在調査やデータの利用は限られており、分析が進んでいない状況です。これは今後の課題だと思います。(둘째, 일본이나 한국처럼 결혼을 해 야 출산도 하는 나라에서는 혼인율이 높아야 출산율도 올라가죠. 혼인이 줄면 출산도 줄어들죠. 일본은 결혼을 충분히 장려하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죠. 연령대가 높으면 자녀출산도 제한되니까 특히 젊은이들의 결혼이 저출산 극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안정적 취업을 보장하고 젊은 남녀가 함께 지낼 기회를 제공하면 결혼 결심도 더 쉬울 겁니다. 물론 남녀간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얼마나 혼인 건수를 늘릴지는 불명확 합니다. 검증이 필요하죠. 결혼상담소나 매칭 앱 등에서 매칭한 커플의 성혼률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조사나 데이터 이용이 한 정적이라 분석이 어려워요. 이게 앞으로 과제 입니다.)

Q3.

韓国の少子化の急速な進展の背景要因として、1980年代まで続いた産児制限と急速な経済成長が指摘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指摘にどの程度同意するか?また、これとは別に、韓国が世界第1位の低出生記録を維持し続けるもう一つの理由があると見ているか? (한국에서 초저출산이 급속히 진전된 것은 1980년대까지 이어진 산아제한과 급속한 경제성장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교수님께서는 이것 말고 한국이 압도적, 초격차, 세계 1위 저출생 국가인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A3.

産児制限や急速な経済成長が韓国の少子化に影響を与えてきたとの指摘には同意しますが、これら以外にも要因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산아제한이나 급속한 경제성장이 한국의 저출산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지적에는 동의합니다만, 이것 이외에도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よく言われているように、ソウルへの一極集中とソウルにおける地価や教育費の異様な高さは、少子化を加速させていると思います。ソウルは地価や教育費の高さから子どもを産み育てるには不向きな場所ですが、大都市であるがゆえに多くの若者を引き寄せ、そこで人口を縮小再生産させています。まさに、ソウルはブラックホールのような存在だと言えます。日本でも東京一極集中は同じような問題を引き起こしていますが、ソウルの問題はより深刻だと言えます。(자주 지적된 것처럼, 서울 인구집중과 높은 집값, 비정상적으로 높은 교육비 등이 저출산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비, 교육비로 볼 때 서울은 아이 낳고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대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를 끌어들이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기 어려운 곳에 모여 살기 때문에 축소재생산이 나타나 는 것입니다. 서울은 블랙홀과 같은 존재입니다. 일본도 도쿄 일극 집중은 같은 문제를 일으키죠. 서울은 도쿄보다 심각합니다.)

また、韓国人の結婚意欲や出生意欲が低いことも要因となっています。例えば、未婚女性の4人に1人が結婚の必要性を感じておらず、また、過半数の若者が結婚後に子どもを持つ必要がないと考えている、との報告があります。こうした低い出生意欲は日本でも同様に見られます。出生意欲は出生行動を具現化するための前提条件なので、これが低いことは深刻な状況であると言えます。(또, 한국인의 결혼 의욕이나 출생 의욕이 낮은 점도 문제죠. 가령 미혼여성 넷 중 한명이 결혼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해요. 젊은이 절반은 결혼 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가질 의욕이 이처럼 낮은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가지려는 의욕이 있어야 행동으로 이어지죠. 의욕이 낮은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Q4.

日本では「20歳から39歳の女性人口が30年間で半分以上減った自治体」が消滅可能性都市として定義されている。若い女性が大都市に去ると、若い男性たちも追うように去り、結局高齢者だけが残る自治体になって

しまう。若い女性が地方圏に残るようにするには、どのような政策の組み合わせが必要だと考えるか? (日本은 '20세부터 39세 여성 인구가 30년간 절반 이상 줄어든 지자체'를 소멸가능 도시로 정의하네요. 젊은 여성이 대도시로 떠나면 젊은 남성들도 따라가죠? 결국 어르신들만 남죠. 젊은 여성이 지방도시에 남아있게 하려면 어떤 정책조합이 필요할까요?)

A4.

若い女性を大都市へ移動させ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は、地方を若い女性にとって魅力的な町にする他に、いと思います。依然として性別役割分業意識が強く残っている地方自治体も多く、そのような自治体で 出産・育児と仕事を両立させることは難しく、大都市に流出してしまいます。地方自治体の旧態依然とした文化を変革する必要があります。(뻔한 얘기지만, 지방 지자체가 젊은 여성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탈바꿈 하면 되죠. 하지만 지방일수록 성 역할에 따른 분업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런 지자체에서 일과 출산·육아를 양립시키는 건 어려워요. 다들 대도시로 빠져 나갈 겁니다. 지자체가 과거의 성역할 문화를 바꿔야 해요.)

また、地方自治体の雇用吸収力の弱さも原因です。魅力的な仕事は地方圏では見つからないため、おの ずと大都市に人口が流れてしまいます。ただし、地方自治体に高い雇用吸収力を発生させることは容易ではありません。日本では地方創生の名のもとに地方活性化を行ってきましたが、なかなかうまく行っていないのが現状です。(지자체의 고용흡수력이 약한 것도 문제입니다. 젊은 여성에게 매력적인 일자리가 지방에 많다면 저녁에 대도시로 빠져 나갈 이유가 없죠. 하지만 지방정부가 높은 고용 흡수력을 갖기가 쉽지 않죠. 일본은 '창의적인 지방생활'을 모토로 지방 활성화를 꾀해 왔지만, 성과가 잘 나지 않아요.)

他方で、地方自治体に残り、平均的に多くの子ども産む女性たちがいることも事実です。彼女たちは 自分が生まれ育った自治体を好んでいると考えることもできます。実際、そのようなことを言う女性たちを見たことがあります。しかし、より具体的な調査が必要だと思います。すなわち、なぜ地方に残り、なぜ多くの子どもを産んだのかを詳細に調査する必要があります。ここに、少子化対策を効果的に行うためのヒントが隠れ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방에서 아이도 많이 낳고 사는 여성들이 있죠. 자신이 태어나 자란 지자체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사실 저도 그런 말을 하는 여성들을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왜 지방에 남아 있고 왜 많은 아이들

을 낳았는지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저출생 대책의 숨은 힌트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Q5.

以前、私はデ]タを用いて、「日本と韓国の将来の人口増減率を比較すると、短期的には日本の減少率の方が大きい、長期的と見ると韓国の減少率の方が大きいこと」を示した。このことについて、もう少し分かりやすく説明して欲しい。(한일간 미래인구증감률을 비교한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감소율이 더 크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의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왜 그런거죠?)

A5.

合計特殊出生率は1人の女性が生涯産む子どもの数を表していることから、この水準が人口置換水準を下回ると人口は一定に維持できず、縮小再生産します。また、出生率の水準が小さければ小さいほど縮小再生産の程度は強まります。(합계출산율은 1명의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나타냅니다. 대체출산율인 2.1명을 밑돌면 인구 수는 일정하게 유지될 수 없고, 축소재생산 됩니다. 또 출생률이 낮으면 축소재생산의 정도는 강해집니다.)

日韓の合計特殊出生率を比較してみると、2000年頃までは韓国の出生率が高かったため、縮小再生産の程度は日本の方が強かったと言えます。しかし、その後、韓国の出生率はさらに低下し、2023年では日本が1.2であるのに対して韓国は0.72であり、韓国の縮小再生産の傾向が強まり、日本を上回っています。この時期に生まれた子どもが将来母親の年齢に達すると、日本と比較して韓国の出生数の減少傾向は強くなり、縮小再生産傾向も強まるのです。これが、将来において日本よりも韓国の人口減少率が大

きい原因となっています。(한일의 합계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2000년쯤까지는 한국의 출생률이 높았기 때문에 축소재생산의 정도는 일본이 더 강했죠. 하지만 이후 한국의 출생률은 더욱 하락해 2023년 일본은 1.2, 한국은 0.72였죠. 한국의 축소재생산 경향이 강해져 일본을 웃돌고 있는 거죠. 이 시기에 태어난 아이가 장래 어머니의 나이에 이르면, 일본에 비해 한국의 출생수의 감소 경향은 더 강해집니다. 축소재생산 경향이 강해진다고 표현하죠. 장래 일본보다 한국의 인구 감소율이 큰 이유입니다.)

また、韓国における過去の高出生率・人口増加によってもたらされた将来期間における高齢者数の持続的な増加も、韓国の人口減少率が相対的に大きい原因となっています。例えば、1960~70年頃の出 生率を日韓で比較すると、日本は2程度であるのに対して韓国は4程度となっています。したがって、こ の頃の持続的な人口増加は日本よりも韓国の方が大きかったのですが、これは将来、日本の高齢者の増 加率よりも韓国の高齢者の増加率の方が大きくなることを意味します。そして、高齢者の増加率の高さ は、死亡率の増加率の高さに直結します。このことも、将来において日本よりも韓国の人口減少率が大きくなる原因になっていると考えられます。

(한편으로 한국에서 과거 높은 출생률과 인구 증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고령자가 됐죠. 인구가 많았을 때 태어난 다수의 고령자들이 한꺼번에 평균 수명에 다다르면 그때부터 인구 감소율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가령 1960~1970년 합계출산율이 일본은 2 정도인데 한국은 4정도 입니다. 이 기간중 태어난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망하면 그만큼 인구감소세도 가팔라지는 거죠. 결국 인구감소세도 한국이 일본보다 가파르게 됩니다.)

Q6.

以前、私は「私教育費負担が高いほど出生率が低い」ことを示した。この研究内容についてもう少し詳しく説明して欲しい。また私は、その際、宮崎県は出生率が日本で2番目に高いことを示したが、これは、宮崎県では私教育費が低く、それゆえに出生率が高く、持続可能な自治体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 のか?それとも、教育条件を含むより包括的な好条件が作用しているということか?宮崎県の持続可能性の要因は何か?

(교수님께서 연구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높을수록 출생률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 연구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또 그 얘기 하시면서 “미야자키 현은 출생률이 일본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미야자키 현은 사교육비가 낮고, 따라서 출생률이 높아 지속가능한 지자체”라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교육조건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인가요? 미야자키현 지속가능성의 요체는 뭘니까?)

A6.

まず、宮崎県は持続可能性のある自治体とは言えません。それは、宮崎県の出生率が人口を一定に維持できる人口置換水準を下回っているから

です。宮崎県の合計特殊出生率は2023年で1.49と日本で第2位の高さで、全国値1.2と比較して高い水準ですが、人口置換水準を下回り、最近低下傾向を示しているため、持続可能な状態とは言えません。また、宮崎県の社会増減率はマイナスであるため、人口流入により人口を増やすことも難しい状況です。

(우선, 미야자키현은 인구에 관한 한 지속가능한 지자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출생률이 대체출산율(2.1명)을 밑돌고 있기 때문이죠. 미야자키현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에 1.49로, 일본에서 2위입니다. 전국 평균인 1.2에 비해 높다는 것이지, 지속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는 없죠. 또 미야자키현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고려한 사회증감율도 마이너스죠. 유인인구를 늘리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なお、社会増減率がプラスで、その値が日本で最も高い大都市東京でさえも、持続可能性のある自治体と言えないことには留意する必要があります。なぜなら、東京都の出生率は日本最下位であり、当然人口置換水準を下回っているからです。現在は、かろうじて地方圏から人口を吸収することで高い社会増減率を保っていますが、地方圏でも人口減少が進んでいるため、長期的には地方圏から東京都への人口流入が途絶えるので、東京都も人口の縮小再生産から逃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아울러 사회증감율이 플러스(+)로, 그 값이 일본에서 가장 높은 대도시 도쿄조차도 지속가능한 지자체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쿄도의 출생율은 일본 최하위이며, 당연히 대체출산율 2.1명을 밑돌기 때문입니다. 도쿄도가 현재 지방권에서 인구를 흡수하는 식으로 높은 사회증감율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지방 인구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방권에서 도쿄도로의 인구유입이 끊기죠. 그러면 도쿄도 인구도 축소재생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いずれにせよ、宮崎県の出生率が日本第2位であることは、無視できない重要な要素です。もしも、出生率日本第1位の沖縄県を除き、すべての都道府県の出生率が宮崎県の水準にまで上昇すれば、人口置換水準にまで至らないまでも、状況は改善します。宮崎県の出生率の高さの原因として考えられる一つの要因は、家賃の低さです。なぜなら、宮崎県の家賃水準は、2023年で見ると日本の都道府県の中では3番目に低いからです。宮崎県教育物価も都道府県の平均水準を下回りますが、家賃水準の方が効果は大きいと考えられます。

(어쨌든, 미야자키현의 출생율이 일본 제2위인 것은 무시할 수 없죠. 일본에서 출생율 1위인 오키나와현을 제외하고, 모든 도도부 현의 출생율이 미야자키현의 수준에까지 상승하면, 대체출산율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황은 개선될 것입니다. 미야자키현의 출생율이 높은 하나의 요인은, 낮은 집세입니다. 미야자키현의 2023년 임대료 수준은 일본의 도도부현 중에서는 3번째로 낮죠. 미야자키현의 교육, 물가도 도도부현의 평균 수준을 밑돌지만, 낮은 집세가 높은 출생률에 기여한 효과가 큰 편입니다.)

いずれにせよ、教育費負担軽減が少子化を克服する上で重要であることに変わりありません。日本で理想子ども数に比べて予定子ども数が少ない理由として世帯が最も多く回答しているのは、「子育てや教育にお金がかかりすぎるから」となっているからです。また、私の実証分析からそのことが明らかにされています。この分析では、都道府県別データを用い、教育物価の上昇を教育費負担の上昇と見立てて分析を行いました。その結果、教育物価が上昇するほど出生率が低下するという結果が導き出されました。このことは、教育費負担軽減策が少子化対策として有用であることを示唆しています。前述したように、教育費負担の軽減は子育て費用の負担軽減に直結する施策なので、重要です。

(미야자키 현의 낮은 교육비가 저출산 극복에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일본에서 이상적인 어린이 수에 비해 예정되는 어린이 수가 적어요. “육아나 교육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하는 가구가 가장 많아요. 저의 실증분석에서도 사실로 밝혀졌고요. 저는 도도부현별 데이터를 이용해 교육물가의 상승과 출생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교육물가가 곧 교육비 부담이라고 본거죠. 분석 결과, 교육물가가 오를수록 출생률이 저하된다는 결과가 도출됐죠. 이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저출산 대책으로 유용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비 부담 경감은 육아비용 부담경감에 직결되는 정책이므로, 중요합니다.)

なお、宮崎県で興味深いのは、「住みやすい」、「子育てしやすい」と言う人が目立つことです。これは文化的な要因とも絡みますが、社会環境が充実していることを反映していると考えられます。こうした自治体では、社会環境の良さを活かした少子化対策を実施することが重要だと考えます。例えば、「まち保育」の推進などです。こうした視点は、少子化対策にとって重要と考えています。

(미야자키현에서 흥미로운 점은 “살기 쉽다”, “아이 키우기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자주 눈에 띄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요인과의도 얽혀 있

지만, 사회환경이 일단 충실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런 지자체가 가진 사회 환경의 장점을 살린 저출생대책이 필요한거죠. 가령 ‘마을 교육’ 같은 정책을 추진해볼만 합니다. 저출산 대책에서 이런 관점이 아주 중요하죠.)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북 한

박소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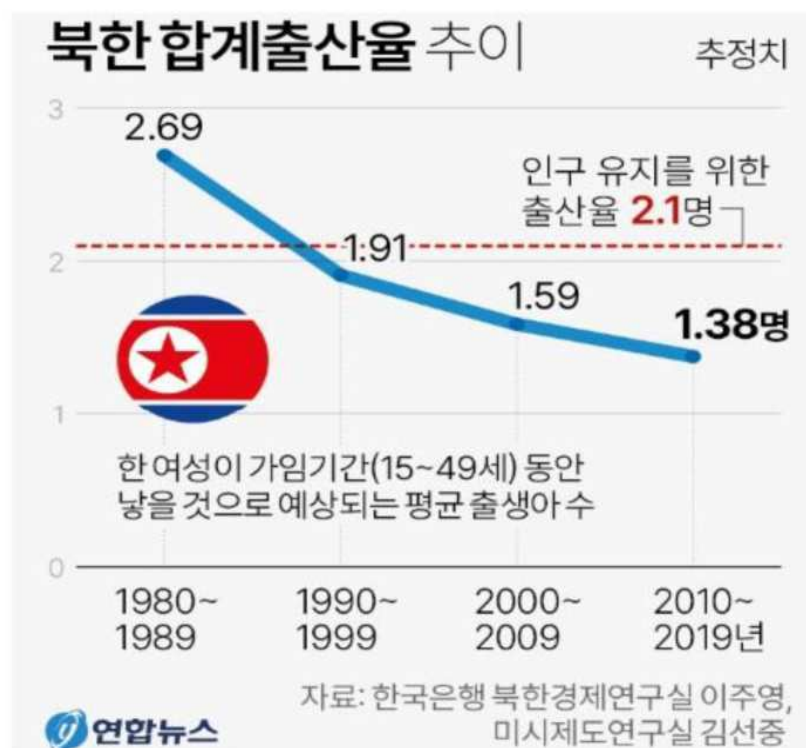
국회도서관장 비서관(북한학 박사)



아시아 저출생 세미나
(2024년 11월 7일)

북한의 저출생 현황과 대응

박 소 혜
북한학 박사



북한의 합계출산율(통계청)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북한	1.884 명	1.870 명	1.857 명	1.845 명	1.840 명	1.818 명	1.809 명	1.793 명	1.790 명	1.777 명
남한	1.203 명	1.147 명	1.051 명	0.970 명	0.914 명	0.887 명	0.880 명	0.874 명	0.883 명	0.893 명

2024 ESCAP population data

○북한의 합계출산율

-2024년 1.8명 (cf. 한국, 홍콩, 마카오 0.7)

-1960년대 5.11명 -> 2020년 1.91명

○북한의 고령인구

-65세 이상 고령인구, 전체의 12.4%(고령화사회)

-2050년 21.4%(초고령사회 예상)

북한의 인구정책

- 인구통제정책
 - 노력영웅(노동이 애국)
 - 위험성 높은 임신
- 인구장려정책
 - 모성영웅(다산이 애국)
 - 다자녀우대정책: 다자녀 세대증, 다산모 치료권, 교육보조금, 주택공급 우대

무엇이 문제인가

- 인구문제는 '인구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
- 개인 차원, 출산은 개인의 선택?
- 국가 차원, 저출산은 '선진국' 현상?
- 지구 차원, 인구가 너무 적다?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 귀하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

- 지구 차원, 세계 인구의 60%는 아시아에
- 국가 차원, 국가 경쟁력과 애국주의 vs 다문화사회
- 개인 차원, '지금 여기+우리' 살기 좋고 행복해야
- 인구는 미래, 인구전략이 필요

감사합니다

박소혜

fristar626@hanmail.net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러시아

마리아 디멘토바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사 서울지국장



러시아 저출생 문제와 극복을 위한 노력

마리아 디멘토바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사 서울지국장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러시아 저출산 사례와 대응 능력에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외국 나라의 케이스는 한국 저출산 문제 해결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출산율 문제는 오랫동안 가장 논의되고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인구 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결과는 정부로 하여금 출산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인구 증가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게 만듭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인구 통계와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한 정책과 조치를 자세히 다룹니다.

러시아의 출산율 상황

지난 몇 십 년 동안 러시아의 인구 상황은 크게 변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경제적 어려움, 소련 해체, 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과 관련된 출산율 급감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일정한 인구 증가가 있었으나 이 추세는 일시적이었고, 2010년대에는 다시 감소로 전환되었습니다.

2023년 러시아 통계청(Rosstat)의 데이터에 따르면,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총 출산율(즉, 한 여성이 낳는 아이의 수)은 1.5~1.6으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보다 훨씬 낮습니다. 2022년에는 약 13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며, 이는 2021년보다 6.5% 적은 수치입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온 출산율 감소 추세의 연장선상입니다. 반면, 사망률은 여전히 높아 인구의 자연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낮은 출산율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적 불안정, 일부 지역에서의 높은 실업률, 생활비 상승,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또한, COVID-19 팬데믹의 인구학

적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팬데믹은 사망률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출산 결정을 미루게 하는 결과도 초래했습니다.

인구학적 감소와 인구 구조 문제

러시아의 낮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이른바 '인구학적 구멍'입니다. 이는 1990년대의 인구 감소로 인한 결과로, 이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의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가임기에 있지만, 이 집단의 수가 정상적인 출산율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인구 구조는 노인 비율이 높고 청년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인구 감소를 어느 정도 보완하는 이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만으로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출산율 감소

출산율 감소는 특히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에서 두드러집니다. 심리적 원인 중 하나는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부모가 겪은 어려움을 목격했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문제, 불안정성, 가정 유지를 위한 어려움 등은 밀레니얼 세대의 의식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가정을 꾸리는 것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를 선호합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가치에서 자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로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소련 시절과 1990년대에 종교의 부재로 인해 가족 가치는 약화되었고, 개인의 성취, 물질적 풍요, 자기 실현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점점 더 경력, 여행, 자기 계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 감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의 출산율 증가 정책

인구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가장 잘 알려진 조치 중 하나인 모성 자본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모성 자본은 두 번째 및 그 이후 자녀 출산을 결심한 가정을 위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모성 자본 금액은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2023년에는 약 70만 루블에 달합니다. 이 자금은 주거 조건 개선, 자녀 교육, 어머니의 연금 적립 부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모성 자본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첫 번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는 젊은 부모들을 지원하고 자녀를 더 일찍 갖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국은 이러한 지원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가정의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성 자본 외에도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다른 조치들도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세금 공제와 주택 담보 대출 혜택이 도입되었습니다. 둘째 및 이후 자녀가 태어난 가정을 위한 보조금 이자율은 젊은 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2021년에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7세 이하 자녀에 대한 월별 지원금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출산율 증가를 촉진해야 합니다. 2022년에는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17세 이하 자녀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한 조건을 개선하는 조치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유치원과 보육원의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부모가 더 빨리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여성들에게 중요하며, 커리어를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출산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Childfree” 사상 금지법

10월 중순, 러시아에서 "차일드프리(childfree)" 라이프스타일 이념을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정보법」, 「언론법」, 「광고법」, 「영화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법」 등 여러 연방법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 두마(러시아 하원) 의장 볼로딘은 이 법안이 출산 거부 이념의 선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개별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무자녀주의 선전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현상"입니다.

이 법안은 특히 출산 거부를 선전하는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언론과 광고에서의 이러한 정보 유포도 금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은 최대 10만 루블, 공무원은 최대 20만 루블, 법인은 최대 100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대 90일간의 활동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선전이 이루어질 경우, 벌금은 두 배로 증가할 수 있으며, 최대 500만 루블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 정당의 의원들은 두 개의 법안 패키지가 1차 심의를 통과한 후, "차일드프리" 선전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수정안에서 예외 경우들을 포함하는 걸 제안했습니다. 수정안 "의학적 금기사항, 종교적 신념 또는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경우 childfree 선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전통적 가치의 홍보와 러시아 종교의 역할

또한 러시아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부활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청년층의 가치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가족 관계를 홍보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도구 중 하나는 가족 가치를 지원하고 다자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러시아 정교회(РПЦ)와의 협력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가정 지원, 자녀 양육, 결혼 제도 강화 등을 목표로 한 사회적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회는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공동으로 조직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계몽 활동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전통적 가치를 보호하고 서구 문화적 경향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대상 비전통적 성적 관계 선전 금지법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가족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2022년에는 전통적인 결혼과 다자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및 문화 분야의 가족 가치 보호를 강화하는 수정안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가치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종교성과 자녀 수는 연관성이 있지만, 이 연관성은 높은 수준의 종교 사회화(성장기 동안 정기적으로 종교 서비스를 참석하는 것)와 사회에서 종교적 배경의 지원이 있을 때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러시아를 포함한 정교회가 지배적인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에서는 종교 사회화 기관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아 이러한 연관성이 덜 뚜렷합니다.

다른 한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젊은 세대의 종교성 수준은 그들의 생식 태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2011-2016년 동안 여러 지역에서 종교 단체의 수와 신자의 비율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 출생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종교적 참여도가 높고 전통적인 문화를 지닌 지역에서 더 높은 출생률이 관찰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체첸과 다게스탄과 같은 무슬림이 주를 이루는 북캅카스 지역들이 주로 정교회 신앙이나 세속적인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보다 더 높은 출생률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로 확인됩니다. 인구의 95%가 이슬람을 신봉하는 체첸은 최근 몇 년간 러시아에서 출생률 지표의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망과 가능한 해결책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출산율 장려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중 하나는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는 많은 가정이 자녀 출산을 미루게 만듭니다. 소득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자녀를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 문제도 주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 지원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아 많은 가정에게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젊은 부부는 자녀를 낳기 전에 자가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가정 형성을 미루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출산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생활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계속 해줘야 합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더 복잡한 지원이 중요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인프라 개발을 계속해야 합니다. 유치원, 학교, 의료 시설의 발전은 자녀가 있는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부모가 더 빨리 직장 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모들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유연한 근무 시간, 재택근무, 육아 휴직의 가능성은 자녀를 낳고도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가족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끝없이 해야 합니다. 현대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개인주의의 가치를 선호하면서 개인 발전, 경력, 여행 등에 중점을 두며, 이는 가정 형성율을 늦추는 결과를 낳습니다.

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도덕적, 문화적, 종교적 흐름이 사회에 다시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한국 경우에도 유교가 이러한 역할을 해왔다고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제 러시아도 한국도 젊은 세대에게 전통적인 가족을 주요 가치 중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문화적 중심을 되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문서의 내용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이집트

아쉬라프 달리

아프리카기자협회(CAJ) 사무총장



아쉬라프 달리 Ashraf Aboul-Yazd) 아프리카기자협회 사무총장(발표 인터뷰)

아시아 저출생 : 두 개의 얼굴을 한 하나의 문제
(Low Birth Rate in Asia: The Double Faces of a Single Problem)

Q 1. 인구 1.14억명인 이집트의 합계출산율이 2021년 3.23명. 정부는 대체출산율인 2.11명을 목표로 가족계획, 그러니까 계속 산아제한 정책을 펴 왔군요?

(A1) 산아제한이 인구 1억을 넘긴 몇 년 전 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1965년 당시 나세르 대통령 때 '가족계획위원회'에서 시작됐죠. 이후 1980년대 중반 무바라크 대통령 때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의원장으로 나선 '국가인구위원회'로 이어졌어요. 1996년 총리가, 2002년에는 보건인구부 장관이 의장을 맡았어요. 2009년 가족인구부 장관이 위원장이 됐죠.

1980년대 이래 지금까지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약 30억 이집트 파운드를 지출했어요. 전국에 6000개 이상의 가족계획관서가 설립됐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했지만, 2017년 인구가 결국 1억400만 명으로 급증했어요.

합계출산율이 5.3명이던 1980년대부터 여성들은 피임을 시작했고, 피임착용기구(IUD)와 피임약이 널리 퍼졌어요. 이 때부터 사실상 이집트 여성의 출산율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수잔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부인의 후원으로 가족 계획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대규모 미디어 캠페인이 있었죠. 1995년에 3.6명까지 떨어졌어요. 2002년 '이집트의 건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 여성들은 가족계획 관련 정보를 텔레비전(40%)과 의사(27%)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렇게 출산율이 하락하다가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3.0으로 바닥을 찍고 2012년 3.5로 다시 상승했어요. 최근 2.9명 대로 다시 하락해서 대체출산율 수준인 2.1명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Q 2. 이집트 정부가 너무 높은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무척 애쓰고 있군요.

(A 2) 2017년 7월 이집트 보건인구부는 '생명선(Life line)'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출산율을 2.4%까지 줄이는 캠페인입니다. 보건인구부는 종교적, 경제적 신념 때문에 피임에 저항하는 농촌 지역, 특히 대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계획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18개 주 1만2000명의 농촌여성개발 지도자들이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올 5월 보건인구부가 '화요일'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의료기관과 주민건강센터에서 여성 건강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계획프로그램 지표관리를 위해 가가호호 지도방문도 했죠. 이를 통해 가족 계획을 아예 하지 않거나(58.5%), 중도포기(30%), 원치 않는 임신(16%) 등의 문제가 꽤 해결됐습니다. 구체적이고 괜찮은 성과를 거둔거죠.

이집트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자연 인구 성장률이 감소했습니다. 피임약 사용이 증가했고요. 정부가 직접 도움을 주려는 목표에는 다소 못미쳤고, 아직은 민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꽤 됩니다.

보건인구부는 또 남성의 생식 건강, 가족계획 등 인식개선 프로그램 수요도 늘리고 있어요.

이집트 의회는 최근 가족계획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2900만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받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Q 3-1. 이집트에서 국가 주도의 가족계획 정책이 지속가능한가요?

(A3-1) 이집트 출산율이 높은 건 국가 주도의 가족계획 정책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상 여성들이 자꾸 줄어 들고요. 특히 외딴 시골지역에까지 국가정책이 미치지 못해요. 피임이 불임과 합병증을 유발하고 성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 역시 국가정책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일찍 결혼하는 조혼 문제 역시 높은 출산율과 관련성이 큼니다. 여기에 남아선호사상 역시 어머니를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여성의 삶의 질이 떨어져도 말입니다.

농사일이나 무역을 돕는 일 등 가족구성원이 비공식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가족은 가난해도 자녀 수를 늘리고 싶어하죠.

Q 3-2. 이슬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슬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자녀를 많이 낳는 운동을 한다고 하죠.

(A3-2) 이집트를 비롯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출산을 조절하는 것을 '신의 뜻에 반하는 행위'로 봐요. 그러니까 종교적 이유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맞지만, 무슬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무슬림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서야 그런 생각을 할 순 없죠.

Q 3-3. 중동 지역의 정치적 안정성, 분쟁 지역 민간인들의 사회적 이동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집트는 그런 점에서 어떤가요?

(A3-3) 과학, 문화적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자녀를 너무 많이 낳아서 빈곤해지더라도 그런 위험을 무시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반정부 감정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보편적 반감이 커지면 가족계획과 같은 정책에도 저항하게 되죠. 이집트에서는 중동 인구의 사회적 이동 문제도 중요합니다. 시리아와 레바논, 팔레스타인, 수단, 예멘, 에리트레아 등 갈등 지역을 떠나 이집트로 몰려 도는 이주민들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런 이주민들이 150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집트 남자는 높은 결혼 비용 문제 때문에 이집트 여성과 결혼을 못하고 이민자, 특히 시리아 여성과 많이 결혼하는 편입니다.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죠.

Q4-1. 쿠웨이트에서 활동하시면서 아시아기자협회(AJA) 회장을 역임하셨는데요. 아시아는 요즘 저출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A-1) 아시아도 프랑스처럼 비슷한 언어권 국가로부터 이민을 장려,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이민자들이 어우러져 살다보면 한자녀에 만족하지 않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이주민 가족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더 갖고 싶도록 유도하는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죠. 미래사회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Q4-2. 이주민 중심의 사회적 이동이 저출생 문제의 주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A-2) 사실 모국에서의 정체성과 이주지역에서 나고 자란 자녀의 정체성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한 세대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문화적 충돌이 있을 수 있죠. 따라서 모든 국가, 모든 문명사회에서 이주민을 통한 인구 유지 정책이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화적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은 이상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봐요. 특히 산업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더 더욱 그렇습니다.

Q5-1. 회장님은 한국에 자주 오셨습니다. 국제 저널리스트로서, 한국이 저출산율에서 초격차로 세계 1위를 유지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A5-1) 한국은 국민소득이 증가한 시기에 생활비와 사치품도 증가했죠. 이 높은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근무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길이나 교통수단에서 보내는 출퇴근 시간도 포함해서요. 사실 직장이 먼 노동자는 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매일 2~3시간을 더 일하는 셈이죠. 공식적으로 6시간 일해도 실제로는 9시간을 일에 쓰는 셈이죠.

이런 현실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 즉, 부모나 조부모, 형제 자매를 방문하고 아이들을 유치원, 병원, 학교에 데려갈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가족이 없는 직원을 선호하죠.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하는 젊은이들은 가족을 형성하는 것보다 직장 일에서 더 성공을 추구합니다.

한국에서는 카페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크게 증가했는데, 많은 경우 이들 자영업자들은 자녀 보육서비스나 봉양하는 노인 요양 서비스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서비스는 대기업 종사자나 받을 수 있죠. 결국 대부분의 중소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길을 가는 젊은이들은 결혼과 자녀로부터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Q5-2. 한국에서는 미디어가 저출생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A5-2) 제가 보기로, 한국의 신문과 미디어 플랫폼은 매우 발달했는데, 이들은 가족적 가치를 증진하는 수단이 아닌 뉴스와 오락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을 증진하려면 신문이나 잡지, 다른 미디어들이 서로 연결된 가족의 성공 사례와 대가족의 전기를 자주 보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접

근개념을 칭찬하는 텔레비전 채널이 필요합니다. 이 개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보존해야 할 국가적 유산이자 사회적 보물입니다. 이 개념을 확증하는 영화 제작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Q5-3. 한국이 어떻게 초격차 저출생 1위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A5-3) 지난 여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사업적으로 성공한 전직 장관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관님은 자녀 출생 축하금을 인센티브 보너스로 지급, 신혼 부부가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주도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많은 사람이 가족을 꾸리는 모험을 떠나도록 격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랍에미리트처럼 많은 이민자 시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원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공공기관이 최저 비용으로 결혼식을 하도록 도와주고 기혼 부부에게 주택을 할당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한국에서 매우 가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이 이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 부부가 더 낮은 비용으로 함께 삶을 시작하기 쉽도록 더 좋은 조건의 장기대출 제도가 강구돼야 합니다.

신혼 부부가 관광 국가, 해외 또는 국내 매력적인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여행보조금을 제공하면 어떨까요? 국가나 기업은 첫 아이, 또는 둘째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부부에게도 이런 선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모든 솔루션의 성공을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의 기관에서 합의한 국가 계획이 필요하며, 이러한 계획이 단기 및 장기적으로 성공하도록 주도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한 국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미국 공인회계사)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대응 방안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 문제 제기

-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기피현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해가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음
- 경제적인 불안정과 육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젊은 층에서의 결혼기피현상이 심해지면서 결혼율과 출산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력부족현상이나 경제위축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20여년 간 한국 정부는 저출산대책을 위해 300조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산율은 해마다 큰 폭으로 떨어져서, 그동안 시행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됨
- 세제에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이 일부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수준에 못 미치고, 자본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에 비해 노동에 대한 세제혜택이 턱없이 낮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유인이 부족해 보임
-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제라도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근본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현황

◎ 2023년 한국의 사회지표(2024. 3. 26. 통계청 발표)

- ▶ 혼인 연령: 한국의 평균 초혼 연령이 1990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
 - 2023년의 평균 초혼 연령: 남자 34세, 여자 31.5세
 - 2010년의 평균 초혼 연령: 남자 31.8세, 여자 28.9세
 - 2000년의 평균 초혼 연령: 남자 29.3세, 여자 26.5세
- ▶ 출산율: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임
 - 2020년 합계출산율: 0.84, 2010년 합계출산율: 1.23, 2000년 합계출산율: 1.48
- ▶ 출생아 수: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2012년의 48만 5천명 대비 절반 수준임
 - 2020년 출생아 수: 27만 2천명, 2010년 출생아 수: 47만명, 2000년 합계출산율: 64만명

◎ 2022년 사회조사(2023. 11. 16. 통계청 발표)

- ▶ 결혼에 대한 인식: 국민의 절반 정도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함
 - 남성 응답자의 56%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변
(미혼 남성은 36.9%가 결혼해야 한다고 답변)
 - 여성 응답자는 44%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변
(미혼 여성은 22.1%가 결혼해야 한다고 답변)
 -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는 71.6%가 결혼해야 한다고 답변 했지만,
13세부터 19세까지의 10대는 29.1%만 결혼해야 한다고 답변
- ▶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 결혼자금의 부족과 고용상태의 불안정, 그 밖의 경제적인 이유로 답변

■ 저출산의 원인 진단[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 사회경제적 요인

▶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고용형태나 기업규모, 직종에 따른 임금 격차와 고용 안정성 차이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되고 있음
-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한 소득불안은 혼인 시기의 지연, 출산의 연기·포기 요인으로 작용함

▶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

-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는 취업 경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교육 경쟁 또한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혼·만혼 요인으로 작용함
- 나아가 교육에서의 경쟁 격화는 자녀교육의 금전적·시간적·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커짐으로써 그 결과 고용 형태별, 학력 수준별 혼인율 격차는 점차 심화됨

▶ 결혼·출산의 실현을 가로막는 높은 주택 가격

-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2000년 이후 2배로 상승)은 주거비용을 높이고 소비지출 여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러한 주택 가격의 상승은 미혼 인구의 결혼을 어렵게 하고 무주택자의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조사됨

▶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의 곤란

- 여성 고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고용률과 임금수준, 일자리 질 측면에서 남녀 간 격차 지속되는 등 여전히 여성의 ‘노동 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는 지속되고 있음
- 또한 가정 내 평등한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가사노동과 돌봄 수행에서 남녀 격차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고 그 결과, 여성은 ①노동자로서 생존을 위해 결혼·출산을 기피하거나, ② 출산·육아 여건을 감안하여 출산 후 노동시장 이탈(경력 단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 잔존하는 돌봄 공백

-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돌봄 수요 증가로 돌봄 인프라가 확대되었으나 고용 친화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해 여전히 돌봄 공백 존재함
- 그 결과, 일하는 부모는 출산 후 마음 놓고 장시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상황에서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잔존함

◎ 문화·가치관 측면의 요인

▶ 전통적이고 경직적인 가족규범 및 제도의 지속

- 혼인율의 감소와 함께 혼인이나 가족에 대한 관념의 변화, 가족 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현행 가족 관련 법률·복지제도는 ‘법률혼 중심 정상가족’ 규범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가족과 아동에 대한 포용과 존중이 부족함

▶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 여성 인적자본 수준 증가와 성 역할 변화, 불안정 고용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여성과 남성 모두 노동이 필연적인 사회로 전환되었는데, 청년은 자신의 노동 생애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 희망하고 여성은 독립적 생계자로서 경제활동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남성 역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 이후에도 맞벌이를 선호하게 됨
- 그러나 양육과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일·지향 보수주의’ 등 사회분위기로 출산과 맞벌이 양립이 어려워 남녀 모두 결혼·출산 기피로 귀결되고 있음

■ 세법상 관련 제도

◎ 소득세법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제도의 취지는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생계비 정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적공제의 취지에 따르자면, 시간경과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과 물가상승을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정도는 보장될 수 있도록 인적공제액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조정이 없어서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기본공제

- 인적공제 중 거주자 본인과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본공제의 경우 2008년 말 소득세법 개정 때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 후 장기간 변동이 없는 상태임

▶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0~7세까지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연 30만원, 둘째는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인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2024년부터 자녀의 혼인과 출산에 대해 추가로 1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서 나름대로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혼인과 출산을 합해서 1억원의 한도를 적용함으로써 다자녀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2023년 말 개정, 2024년부터 시행)

-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까지만 공제

◎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손금 등 산입(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임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 (2024년 2월 29일 신설)
- 2024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입법발의 되어 있음

◎ 자녀장려세제(조세특례제한법)

-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경우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 지급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 총소득 기준으로 홑벌이 가구인 경우 2,100만원,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총소득이 각각 2,100만원 또는 2,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소득 7천만원까지 소득의 크기에 따라 자녀 1명당 지급액인 100만원을 체감하는 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함

■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 미국의 투자은행인 제퍼리스 금융그룹(JEF)이 베이징의 한 연구소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한국이 세계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국가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2013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자녀를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1인당 GDP의

7.79배에 달한다고 함. 2013년 당시 한국의 1인당 GDP가 2만6,179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아이 한명을 출산해서 18세까지 양육하는 비용은 당시 기준으로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2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할 수 있음

- 이처럼 출산과 육아로 인한 비용부담이 큰 상황에서 현재 한국정부가 하고 있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이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음. 특히, 세제 측면에서도 현재 법률혼이나 공부상의 가족에 대해서만 배우자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일정 요건을 갖춘 사실혼이나 실질적인 동거 및 부양자에 대해서도 각종 인적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현재 최소 생계비 지원에도 못 미치고 있는 각종 인적공제금액과 세액공제 등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헝가리·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DP의 3~5%를 투입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재정적 이유보다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삶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 때문이라는 인구통계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음
- CNN도 최근 한국 정부가 만 1세 이하의 양육비에 대한 지원을 늘려간다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지만, 현재와 같은 일차원적 자금 투입방식 대신에 아이들의 일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음. 특히, CNN은 한국에서의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과 동성결혼의 불인정 등 비전통적 커플에 대한 차별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전통적인 결혼 제도가 아닌 비혼, 이혼, 동성혼 등 다양한 가구의 구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재의 인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청년들의 행복한 결혼생활과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주거 및 보육에 대한 지원과 경력단절 예방정책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고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이제는 결혼이나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족이나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제도들에 대한 인식변화도 함께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조세금융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